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2006. 12.

국민경제자문회의

본 책자는 KDI, KIET,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약 5개월('06.2~6월)간의 연구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산업통상회의, '06.6.30일) 논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 참가 연구진 (가나다순) >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주훈(KDI), 남장근(KIET), 박홍재(자동차 산업연구소), 서중해(KDI, 팀장), 양평섭(무역협회), 어명근(KREI), 윤동훈(한국전자연구소), 이문형(KIET), 장윤종(KIET), 정인교(인하대)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중국 경제의 부상	3
제3장	한미 FTA와 동북아 분업구조	15
제4장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 및 변화 전망	20
제1절	동북아 무역구조의 현황 및 전망	20
제2절	동북아 투자구조의 현황 및 전망	28
제3절	동북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현황 및 전망	32
제5장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53
제1절	주요 산업별 영향	53
제2절	해외투자와 산업공동화	59
제6장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65
제1절	대응전략	65
제2절	주요 정책과제	71
	참가연구진	96

표 목 차

<표 2-1> 중국 주요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6
<표 2-2> 韓·中 품목별 산업·기술경쟁력 격차 요약(2005년)	11
<표 3-1> 한·미 FTA가 한국의 교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	15
<표 3-2> 한·미 FTA 체결시 FDI의 총 유입규모 추정	16
<표 3-3> 산업별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비중	19
<표 4-1> 동북아 3국의 FDI	29
<표 4-2> 동북아 3국의 FDI(2004)	29
<표 4-3> 전자산업 부문별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5
<표 4-4> 일본 자동차업체의 부품조달방식과 원가절감 효과	42
<표 4-5>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별 규모 및 구성비	47
<표 4-6> 의류제품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50
<표 4-7> 직물제품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50
<표 4-8> 한국 의류제품의 주요국 수출 실태	51
<표 5-1> 對中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양극화	53
<표 5-2> 한·중·일 농산물 수출입 현황	58
<표 6-1> 부품소재산업 무역수지	71

그림 목차

<그림 2-1> 中國 제11차 5개년계획 목표와 주요 정책(2006~2010)	9
<그림 4-1>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입 비중 추이	20
<그림 4-2> 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 (역불, 2005)	21
<그림 4-3> 동북아 3국간 산업내무역 비중 추이	22
<그림 4-4> 기술수준별 역내교역 흐름 (2005)	22
<그림 4-5> 기술수준별 역내교역 구성 변화	23
<그림 4-6> 가공단계별 역내교역 흐름(2005)	24
<그림 4-7> 한국·중국·일본의 역내시장에서의 비교우위산업(2005)	25
<그림 4-8> 동북아 역내교역 규모 및 역내교역 비중 전망(수출기준)	26
<그림 4-9> 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 전망(2005→2015)	26
<그림 4-10> 국별 역내투자 규모 (2004)	28
<그림 4-11> 중국의 수입중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32
<그림 4-12> 중국의 수입중 지역권별 점유율 추이	33
<그림 4-13> 중국의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 점유율	36
<그림 4-14>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	37
<그림 4-15> 중국의 자동차 제품 및 부품 수입 점유율	39
<그림 4-16>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제품 및 부품 수출	40
<그림 4-17> 북경현대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	41
<그림 4-18>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부품조달 방식	42
<그림 4-19> 일본 자동차업체의 ASEAN과의 부품생산 국제분업구조	43
<그림 4-20> 중국의 산업기계 및 부품 수입의 주요국별 점유율	48
<그림 4-21> 아시아 의류산업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	49
<그림 5-1> 산업별 성장률과 對中 교역 성장기여도의 분포	54
<그림 5-2>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추이 국제비교	61

제 1 장 서론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제조업을 보유한 일본과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이다. Goldman Sachs(2005)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 및 투자 규모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하이테크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 분업구조는 종래의 산업간 분업에서 향후 산업내 분업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의 확대가 있다. GPN이란 R&D-생산-판매 등 기업의 가치사슬별로 국경을 초월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기능을 재배치(자회사 설립 또는 기업간 제휴의 형태 등)하면서 형성되는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GPN은, 생산과정의 분절(fragmentation)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 및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변화의 근저에는 GPN에 따른 기업간 수직적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의한 공업화전략을 통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GPN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업화 성공을 기반으로, 최근 중국은 발전전략을 "(중국 내수)시장과 (외자기업의 선진)기술을 바꾼다"는 '市場換技術'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자체 브랜드를 확보한다"는 '自主創新'으로 전환하여 자국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힘입어 중국기업의 세계화도 향후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분업구조에 또 다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GPN 확대,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 국제경제 환경 변화는 국내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로 해외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이른바 ‘산업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쇠퇴하는, 이른바 ‘중국발 구조조정 압력’이 작용하고 그 결과 산업간 또는 기업간 양극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GPN 확대는 기업활동 세계화로 인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나, 국내경제구조 및 대응전략의 차이에 따라 국내산업에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GPN이 확대되면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내산업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경우, 국내 투자·고용이 촉발·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 핵심기능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산업공동화는 자명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여부는 확대되고 있는 GPN과 국내산업간 선순환구조의 구축과 이러한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對중국 비교우위의 창출 여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해외투자 확대에 의한 산업공동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국내 투자·생산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연관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일본에 대해서는 비용우위를 확보”한다는 (逆넛크래커)전략 하에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GPN 확대, 중국의 부상 및 한·미 FTA 등 대내외 환경변화는 우리 경제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협요인을 극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의 양상을 GPN 관점에서 분석·전망하고, 분업구조에서 얻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사례 조사와 함께, 작업의 視界를 약 10년 후인 2015년을 상정하여 중장기적인 영향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중국경제의 부상

제1절. 중국경제의 현주소

1. 세계 경제대국으로의 변신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후 약 30년간 연평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한 결과, 2005년에 GDP 규모 세계4위, 교역규모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¹⁾ 그러나 1980년대 개혁·개방 당시 중국경제는 자본과 기술, 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대약진운동(1958~1960년)과 문화대혁명(1966~1976년)으로 국민경제는 붕괴 일보직전이였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이 채택할 수 있었던 전략은 외자기업에 의존한 수출 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밖에 없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點→線→面'²⁾의 외자유치정책은 1990년대 미국 클린턴 정부의 對中 우호전략과 맞물리면서 크게 성공하였다.

외자유입액이 1990년 불과 35억불에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600억 불대로 급증하였으며 연간 투자건수도 90년대 초 7천여 건에서 2000년대에는 4만여 건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말까지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6,224억불, 중국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기업 수는 약 55만 개에 달한다. 미국의 격주간 경제종합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외자기업은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29%를,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등 중국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생산비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

1) 中國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2006」, 1979~200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9.5%

2) 點은 선진(深圳)을 비롯한 5개의 경제특구, 線은 북쪽의 다롄(大連)에서부터 남쪽의 베이하이(北海)까지 연안 12개 도시의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의미하며, 面은 주장(珠江) 삼각주, 창장(長江) 삼각주를 비롯 라오둥(遼東)반도, 교동반도 등 경제개발구를 의미함.

당하면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국제분업 구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역규모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도 GDP 대비 교역의존도는 63%로 세계 평균치보다 15%p나 더 높다. 한편, 임가공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결과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였다. 2005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000억불을 넘어섰고, 여기에 연간 600억불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가 가세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 6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411억불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지금까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은 압축성장에 의한 단기간 내 빈곤탈출이라는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내수와 수출간, 투자와 소비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이 전체 GDP의 34%를 차지해 국제평균치를 10%p 이상을 웃돌고 있는 반면, 내수비중은 53%에 불과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심각한 통상마찰을 야기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도 양적 성장에 의존한 불균형 성장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도시지역 지니계수는 0.42로 국제적 안정수치로 간주되는 0.4를 초과하였다. 중국에서 1인당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上海市와 가장 낮은 貴州省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 7.4배에서 2005년에는 9.9배로 확대되었다. 동부 연안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간 소득격차 문제가 이제는 경제적 차원을 벗어나 민족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1989년 2.3배에서 2005년에는 3.2배로 늘어나,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양적 고도성장에 의해 초래된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以人爲本’의 정치적 구호 하에 질적 성장 위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다.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2006~2010)에서는 주요 정책목표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교역구조 고도화 달성과 국제 분업상의 지위 상승,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외자유치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허용했던 동부 연안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하이테크 산업, R&D 등 지식기반형 FDI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2005년 말 다국적기업 750여개가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현대제철(구 INI스틸)의 H형 강압연공장 설립을 불허한 반면, POSCO의 추가투자를 승인하면서 첨단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술발전전략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중국의 대표적 기술발전전략은 중국 내수시장과 외자기업의 기술을 교환한다는 ‘市場換技術’(시장과 기술의 교환)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우려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방식이 기술혁신에 비효율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나서고 있다.³⁾ 최근 발표된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 전략(2006~2020년)’에서 중국정부는 ‘自主創新’, 즉 중국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기술의 도약적(Leapfrogging)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명실상부한 세계 과학기술 대국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⁴⁾

또한, 중국은 독자적 기술개발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의 자국 출신 고급인력의 귀국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표적 산업기술 정책 중 하나인 ‘火車계획(Torch Program)’에 따라 전국에 13개의 해외 유학인원 창업단지를 설립하고, 해외유학생의 귀국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⁵⁾ 현재 미국내 외국인박사 30만 명 중 21%인 6.3만 명이

3) 중국정부가 자체 판단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 교환전략’의 부진 원인으로는 첫째, FDI가 도입한 기술들이 대부분 생산설비에 체화된 경성기술(Hard Technology), 둘째, 핵심적 기술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강력한 기술보호조치(기술 블랙박스화 또는 모듈화) 또는 기술 이전이 주로 다국적기업 내부간에 진행, 셋째, 중국측 파트너들의 기술학습보다는 이윤창출에 몰두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中國 國務院, “中國中長期科學與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 2005. 12.

5) 산업자원부, 「한-중 산업기술 및 정책 비교」, 2003. 9, pp. 104~110.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8~2004년간 해외유학 후 귀국한 19.8만 명의 중국학생 중 13%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2004년 한 해에 돌아오는 등, 중국 유학생들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독자적 기술과 브랜드 확보 노력의 하나로,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작성하는 등, 특정국가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走出去)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⁶⁾ 1990년대 중반 연간 1억불 수준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2002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4년에는 54억불, 2005년에는 69억불을 기록해 한국의 해외투자 규모를 능가하였다. 중국기업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옹호 하에 기술획득, 시장개척 및 에너지·자원확보 등을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투자(走出去)를 하고 있다.

<표 2-1> 중국 주요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중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하이얼 (海爾集團)	-미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나이지리아 등에 30개 생산공장 설립, 18개 연구실, 8개 해외 무역회사 보유 -미국 가전업체인 메이텍 인수 추진(2005)
TCL그룹	-인도, 베트남 공장 설립 -프랑스 톰슨社 지분인수(2003), 프랑스 알카텔 휴대폰 업무 인수(2004)
레노보 그룹	-실리콘밸리에 R&D센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20여개 分公司 설립 -미국 IMB PC 인수(2004)
BOE	-한국 하이디스 인수(2003)
上海 盛大	-한국 액토즈 소프트사 인수(2004)
上海汽車 工業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2004)

자료 : 「關於走出去的思考(2005.1)」 및 각종 자료 종합.

6) 67개 국가별로 투자 또는 인수장려 산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자동차 등 교통운송설비 제조, 화공원료 제조,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 서비스산업(무역, 유통, R&D, 건축, 교통운송)을 예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 PC 업계의 선두: 레노보(聯想; LENOVO) >

2004.12월, 레노보(舊 Legend)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IBM사의 PC사업을 17.5억불에 인수하면서 일약 세계적 유명기업으로 부상하였다. 레노보는 IBM사의 PC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해외 영업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2%에서 81%로 증가하였고, 세계 PC업계 서열도 일거에 3위로 도약하면서 포춘 500대 기업군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의 IBM PC부문 인수는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론까지 대두될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레노보가 IBM PC사업 부문을 인수한 진정한 의도는 IBM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레노보는 2000년부터 연구개발 투자에 전념, 2001년에 매출액의 4%인 1억 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연구 인력도 300명을 확충하여 1,5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북경 소프트웨어 설계센터, 공업설계센터, 상해 레노보연구원을 잇달아 설립하면서 전국 규모의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2절.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1. 중국정부의 3단계 장기발전전략과 '11·5' 계획⁷⁾

1980년대 초,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 군사위 前주석은 향후 70년간 중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되었던 3단계 장기발전전략은 제3세대인 장쩌민(江澤民)에 이어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로 이어지면서 큰 변화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050년 선진

7) 금번 11·5 계획은 역사상 처음으로 '계획'에서 '규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명칭을 계획에서 규획으로 굳이 변경한 배경은, 이미 중국경제가 충분히 시장경제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문형 외,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5.12, p. 22.

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장기발전전략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79~1999년까지 20년간으로, 국민들의 의식주(溫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치로 2000년 GDP를 1980년의 4배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중국의 GDP는 1980년의 4.2배가 되면서 중국은 계획 목표치를 무려 7년이나 앞당겨 달성하였으며, 절대빈곤 상태 역시 1994년을 전후로 탈출하였다고 중국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2단계는 2000~2020년까지 20년간으로, 국민경제의 ‘小康 상태’를 달성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⁸⁾ 제1단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목표치로 2020년의 GDP가 2000년의 4배가 되도록 설정되었다. 당시 제시되었던 2020년 1인당 GDP 3,000불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인해 조기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단계는 2021~2050년으로, 大同 단계를 실현시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大同 단계’란 일종의 이상형으로, 공유제를 기반으로 정치 민주화와 안정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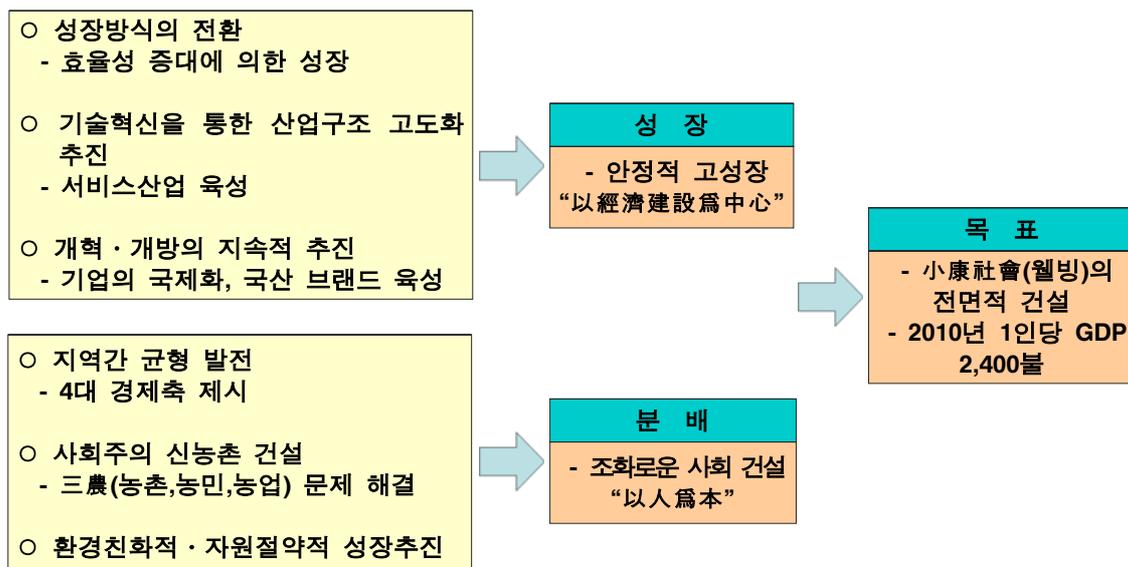
중국정부는 2006~2010년까지 제1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11·5 계획은 성장전략을 포함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책의 기조가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여겼던 덩샤오핑의 경제건설 중심사상에서 탈피하여, 인간중심 사상(以人爲本)으로 전환하였다. 전형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인 先富論도 균형발전전략인 共同 부유사상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11·5 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회 복지제도 확충, 농촌소득 향상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산업정책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수출 우선정책을

8) ‘小康’의 개념은 <詩經> 大雅편에서 인용된 것으로 溫飽段階를 지나 부유하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西漢 경제학자였던 戴聖이 편찬한 <禮記> 禮運에서 ‘소강’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소강은 사유제를 바탕으로 생활에는 여유가 있으며,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고 가정이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

수출 및 내수 병존형으로 전환하고,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기술정책에서도 기존의 “시장과 기술을 바꾼다”는 ‘市場換技術’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자체 브랜드를 확보한다”는 ‘自主創新’으로 전환되면서, 유달리 중국 기업 자체에 의한 독자적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도입보다 혁신과 기술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 성장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됨과 동시에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림2-1> 中國 제11차 5개년계획의 목표와 주요 정책(2006~2010)



자료 : 산업연구원(2006)

2. 2015년 중국경제 전망

세계적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는 중국의 1인당 GDP가 2030년에 1만불을 돌파한 데 이어, 204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경에는 오늘날의 선진국 수준인 3만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⁹⁾ 더욱이 2015년 중국의 GDP 규모를 5조 5,390억불 (1인당 GDP는 3,975불)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15조 8,380억불(1위)과 일본의 5조 8,530억불(2위)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월스트리트가 평가하는 중국경제의 엄청난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현재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향후 10년간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무역구조도 빠른 속도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수출산업이 섬유 등 저위기술산업 중심에서 자동차, 전자 등 중고위 및 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수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위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은 1995년 52.5%에서 2004년 32.7%로 무려 19.8%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반면, 중고위 기술산업의 비중은 17.4%에서 30.8%로 13.4% 포인트가 증가해 중국의 수출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및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빠른 추격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기술재단이 실시한 주요 산업의 기술 및 산업경쟁력 조사 결과, 한·중간 기술경쟁력 평균 격차는 2004년 4.4년에서 2005년 3.8년으로 축소되고 있다.¹⁰⁾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어 2015년경에는 한·중간 격차가 1~2년 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조선, 자동차, 기계, 소재 등 전통 제조업에서 한·중간 기술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이동통신, 2차전지 등 한국과 중국간 출발이 비슷한 新산업에서는 양국간 기술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 Goldman Sachs, "How Solid are the BRIC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1st Dec. 2005, pp. 3~21.

10) <http://www.kotef.or.kr>

<표2-2> 韓·中 품목별 산업·기술경쟁력 격차 요약(2005년)

업종	품목	한·중 기술경쟁력			한·중 산업경쟁력		
		2003년 조사치	2005년 조사치	2010년 예상치	2003년 조사치	2005년 조사치	2010년 예상치
이동통신	GSM	2년	2년	1.5년	2년	2년	1.5년
	CDMA	2년	2.5년	1.5년	2년	1년	0.5년
	통신장비	1년	1년	0.5년	-	0년	△0.5년
디스플레이	TFT-LCD	-	3.5년	1.7년	6년	4.5년	1년
	PDP		3.5년	2년		3.7년	1.5년
	OLED	3년	3.5년	2년	-	-	2년
이차전지	리튬이온 2차전지		2.5년	1년		2년	1년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2.5년	1년		1년	0.5년
가전	청소기		3년	1.5년		1.5년	1년
	세탁기		2년	1.5년		2.5년	1.5년
자동차 부품	스프링		8.5년	7년		4년	2년
	조향장치		6년	4.5년		5.5년	1.5년
	램프		3.5년	2.5년		1년	0년
비철금속	동합금		6.5년	3년		4.5년	1년
	알루미늄		2년	0.7년		5년	0.5년
	희유금속		0.5년	△2.5년		△3년	△4년
공구	절삭공구		5년	3.5년		3년	2년
	다이아몬드공구		3.5년	2.5년		2.5년	1.5년
	전동공구		4년	1.5년		5.5년	1년
조선	LNG선		10년	8년		16.5년	12.5년

자료 : 산업기술재단 (2005).

주 : 1) △는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

2) 기술경쟁력: 설계, 공정, 신제품개발, 시험평가기술 등의 세부기술 등을 종합.

3) 산업경쟁력: 가격, 생산, 품질, 서비스, 납기 등의 주요 산업특성을 종합.

제3절.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기회 및 위협요인)

1. 기회 요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불과 13년만에, 중국은 50여년 교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경제동반자로 부상하였다. 2005년 한국의 對중국 교역규모는 1,006억불로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1,000억불을 돌파하였다. 또한 수교 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연평균 27.7%씩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8%씩 증가하면서 매년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있다.¹¹⁾ 한국은 중국에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대신 중국의 저렴한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상생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면서 중국시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 투자도 2005년 말까지 13,653건에 131억불을 투자하여 수출유발형 선순환의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對중국 투자를 통해 한계산업 또는 분야를 중국에 이전함으로써 유희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저비용의 이점, 자본축적을 통한 투자주도, 독자적 기술개발 전략에 기초한 중국 제조업의 고도성장은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값싼 제품들은 공산품 가격의 하락 내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여,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11)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인 1988~200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창출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676억 불로, 동 기간 한국이 창출한 전체 흑자규모 1,620억 불을 능가(홍콩 제외)함.

이미 중국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한 외자기업의 경제적 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내 부품산업과 조립산업간의 발전 격차 괴리에 의한 부품 수입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 대한 우리의 對中 수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향후 한중 양국간 상생의 수직적 분업구조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2. 위협 요인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을 준만큼, 세계 주요시장의 잠식 등 중국발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995년 6.1%에서 2005년 14.6%로 8.5%p가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3.3%에서 2.6%로 0.7%p가 하락하였다. 일본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10.7%에서 21.0%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5.1%에서 4.7%로 하락하였다.

또한, 저렴한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이에 종사하는 많은 경쟁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신발, 의류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산의 저가공세는 1990년대 가전산업에 이어 2000년대에는 컴퓨터, 핸드폰, 철강산업 순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방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과잉투자가 공급과잉과 덤핑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철강(2005년 말 기준 과잉 생산능력 1억 톤), 자동차(200만 대 과잉), 전해알루미늄(326만 톤 과잉) 등이 대표적 과잉산업이며, 이밖에도 시멘트, 방직, 석탄의 과잉생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12) 이규인 외, “중국 경제의 과열 가능성”, www.china.go.kr

한편,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요의 급속한 확대도 우리 경제에는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원자재·석유·에너지 등의 수입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중국의 주요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는 석유 45%, 철광석 50%, 구리 80%, 알루미늄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한미 FTA와 동북아 분업구조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분업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방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물론, 동북아 분업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한미 FTA는 동북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무엇보다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개방의 범위 및 원산지 규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한중일 교역 및 투자관계 및 對미국시장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회원국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와의 무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양국간 및 역외국가와의 교역 증대 누적 효과는 약 1,440~1,870억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KIEP 연구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주로 추정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개선, 투자 유입 확대, 무역규범의 선진화 등으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가 관세인하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

<표3-1> 한·미 FTA가 한국의 교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불)

	對미국	여타 국가
교역	740.8 ~ 971.1	701.1 ~ 900.1

자료: KIEP 추정치(2006).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한국 내 생산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양국간 수직적 FDI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¹³⁾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태지역 R&D 센터, 지역본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대될 것이다.

역외국가의 경우, 한미 FTA 효과를 보기 위한 이른바 수평적 FDI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⁴⁾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무관세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수평적 FDI를 확대할 수 있다. 선진기술의 확보를 위해 M&A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對韓투자로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표3-2> 한·미 FTA 체결시 FDI의 총 유입규모 추정

(단위: 억 불, %)

	미 국	여타 국가	총 계
증가율(%)	14~35	28~35	
금액(억 불)	48.9 ~ 122.3	225.5~281.9	274.4 ~404.2

자료: KIEP 추정치(2006).

2. 한미 FTA는 동북아 GPN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한미 FTA를 통해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미국기업의 FDI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비용,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으로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가 체결

13) 수직적 FDI란 같은 산업 내에서 모국은 R&D·제품개발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생산·제조 기능은 외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14) 수평적 FDI는 제품의 R&D 및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될 경우,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일본 등 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기업 및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급속한 성장기간 중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유지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동북아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GPN의 틀 속에서 한국을 중·고급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미 FTA는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우리나라가 중국 및 ASEAN 국가들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를 통해 핵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고, 기계설비, 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계류, 특히 중장비 분야의 경우에 한국을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일 기술의존도가 만성적으로 높은 기계 장비 및 부품 등의 수입처 전환, 對韓투자 유치 및 한미간 기술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R&D센터 중심기지로 삼을 인센티브가 증대하게 된다. 가전을 포함한 정보통신(IT) 분야의 경우, 한국이 테스트베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양국간 FTA로 통상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역장벽이 완화되면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 IT, 바이오의약 등 국내산업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채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GM : 세계 자동차산업의 GPN을 활용한 글로벌 경영전략 >

GM은 세계 자동차산업의 GPN 구도 하에서 한국을 경차·소형차 개발 및 생산 기지로 채택하였다. 한국의 소형차 개발 측면의 비교우위를 인정, 한국에서 800~1,000cc급 차세대 경차의 플랫폼을 개발한 후 전세계 GM 자회사들이 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초 인천 부평공장에 '글로벌 감마(γ)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1,200~1,600cc급 소형차를 연 10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전략을 반영하여, GM은 2004.6월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부를 싱가포르에서 상해로 이전했다. GM의 중국 조인트벤처인 상해GM은 현재 중국자동차생산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GM의 아시아전략에 GM대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GM대우의 라세티는 상해GM의 주력 판매차종인 '뷰익 엑세르'로, 매그너스는 '시보레 에피카'로, 칼로스는 '시보레 아베오' 등으로 중국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GM은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의 이스즈, 스즈키, 후지중공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GM대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상해GM이나 기타 아시아지역의 GM계열업체들이 GM대우차의 개발차종을 주력으로 생산할 경우, 국내 관련 부품업체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미 FTA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최대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하이테크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 FDI 유치 경쟁국에 비해 산업 및 기술기반, 인적자원 등의 부문에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시 기술표준 등 국제표준화 논의에 있어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입지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對韓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한국 투자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외환위기 이후 유통, 금융·보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는 경영컨설팅,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하여 동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게 될 것이다.

<표3-3> 산업별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비중

(단위: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건설등)	합계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기타		
32.7	57.3	18.0	14.2	3.8	3.4	7.2	10.7	10.0	100.0

자료: KDI(2005).

주: 1962~2000년 기간 중 누적금액 기준.

한미 FTA는 중국 등 기타국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hub)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2004년 현재 GDP대비 31.9%)이 비슷한 수준의 저소득국가 평균(38%)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현재 제조업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시장잠재성이 큰 편이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및 물류 부문에 대한 선진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기반이 구축되면,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의료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동북아 역내의 수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 4 장 동북아 무역구조의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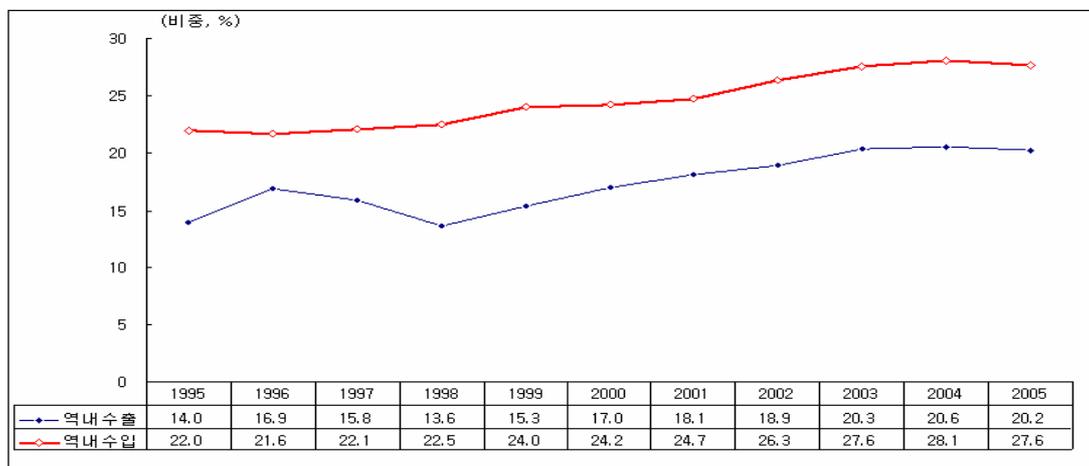
제1절. 동북아 무역구조의 현황 및 전망

1. 현 황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역내수출은 3,325억불로 1995년의 794억불에 비해 약 4.2배로, 역내수입은 3,981억불로 1995년의 1,323억불에 비해 3.0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3국 교역 총액의 20% 이상이 동북아 3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역내 수출이 3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4.0%에서 2005년에는 20.2%로, 역내수입이 3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에서 27.6%로 높아졌다.

역내교역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은 물론 무역수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수출 중 對중국 수출이 21.8%, 對中 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의 99.5%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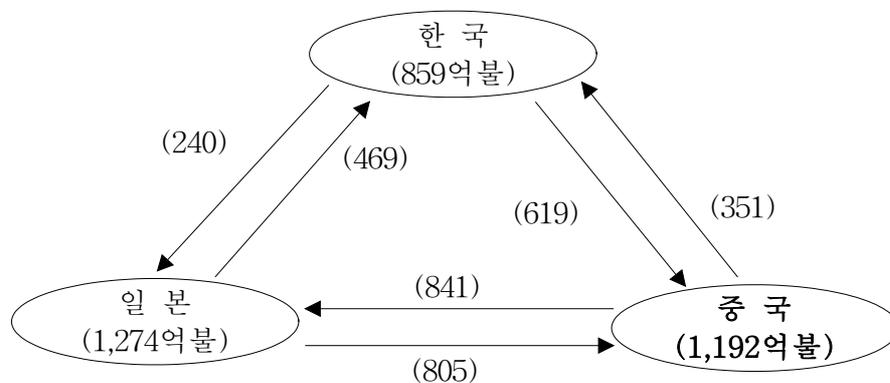
<그림 4-1>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 PC-TAS를 기초로 작성,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단위(%).

역내교역에 있어 1995년에는 일본이 중심축이었으나, 2005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역내수출에서 日·中間 교역이 49.8%(1995년 44.1%), 韓·中間 교역이 29.2%(1995년 13.8%), 韓·日간 교역이 21.3%(1995년 42.1%) 차지하였다. 특히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비중은 상승세로 전환, 역내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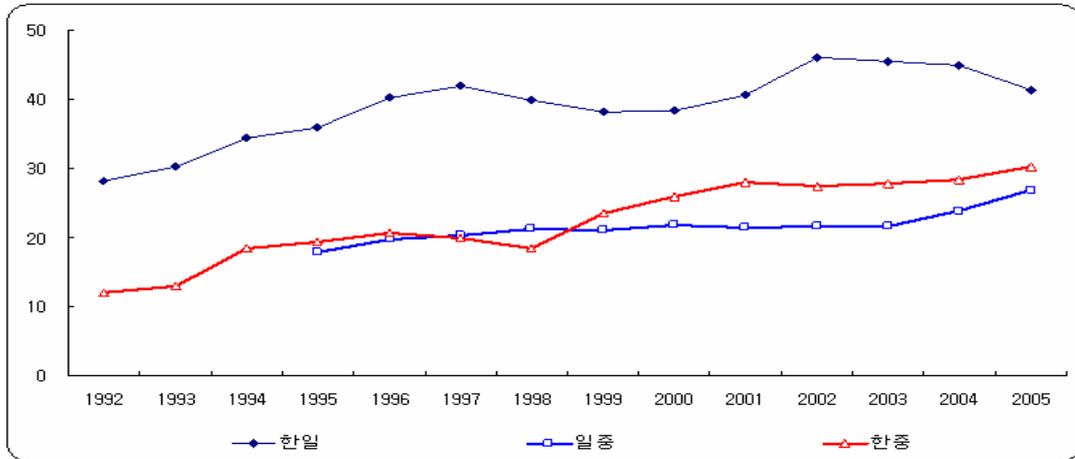
<그림 4-2> 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 (억불, 20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북아 3국간 무역은 종래의 산업간무역(inter industry trade)에서 점차 산업내무역(intra industry trade)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국가간 교역에서 산업내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한중 및 중일간 산업내 무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일간 산업내 무역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간에는 전자업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에서는 한국의 일방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간에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에서, 중일간에는 전자, 자동차 업종에서 산업내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3> 동북아 3국간 산업내무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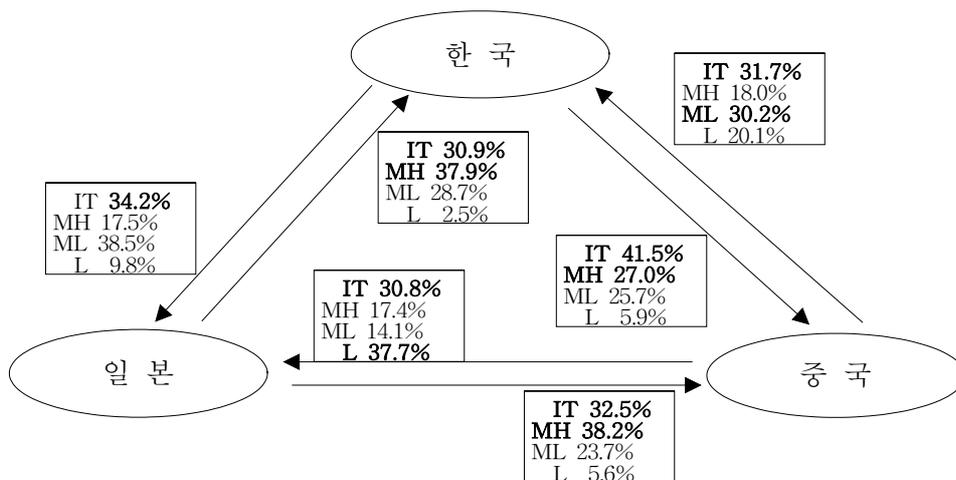


주 : HS 6단위를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단위(%).

기술수준별로 볼 때 동북아 3국간에는 IT산업에서 교역이 활발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중·고위와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일본은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중국은 중·저위 및 저위기술 산업에서 역내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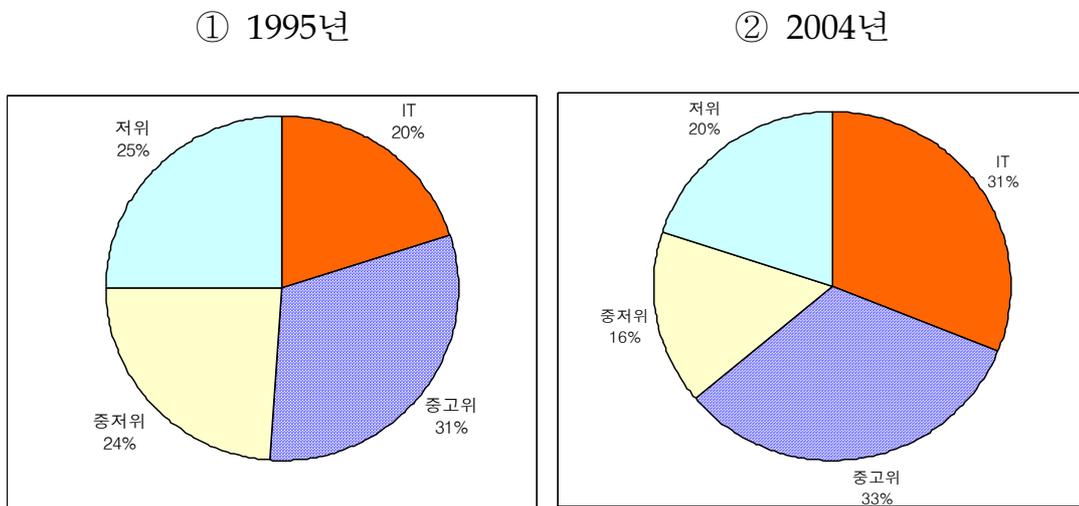
<그림 4-4> 기술수준별 역내교역 흐름 (20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역내 제조업 교역 중(수출 기준)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0%에서 2004년 31%로 대폭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20%로 하락하였다. 역내 교역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IT 산업과 중·고위 기술산업, 중·저위 기술산업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를, 저위 기술산업에서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3국간 상대적 비교우위가 점차 수렴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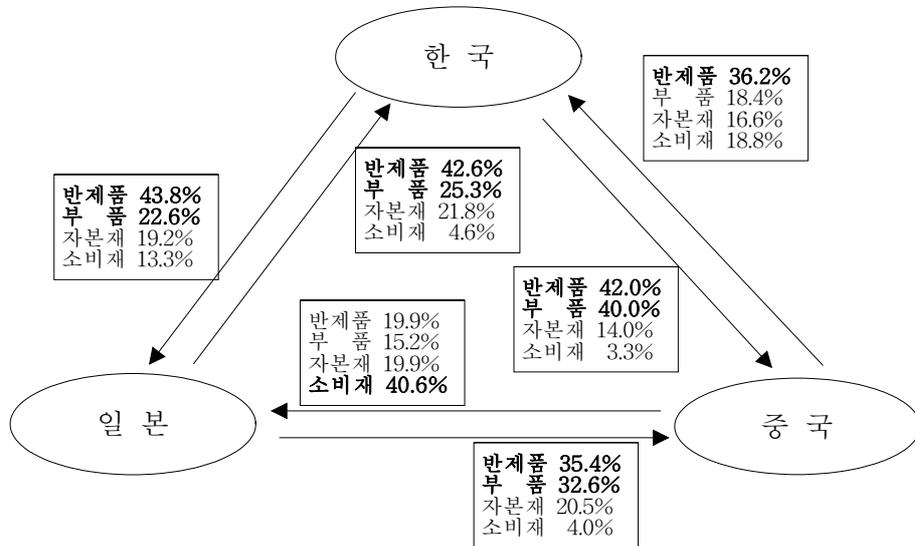
<그림 4-5> 기술수준별 역내교역 구성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가공단계별로 역내교역 구조를 살펴볼 때,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은 반제품 및 부품 등의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반제품과 부품 교역에서, 일본은 반제품, 부품 및 자본재 교역에서, 중국은 반제품과 소비재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패턴은 역내 중간재를 이용하여 조립·가공 후 역외로 수출하는 분업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6> 가공단계별 역내교역 흐름(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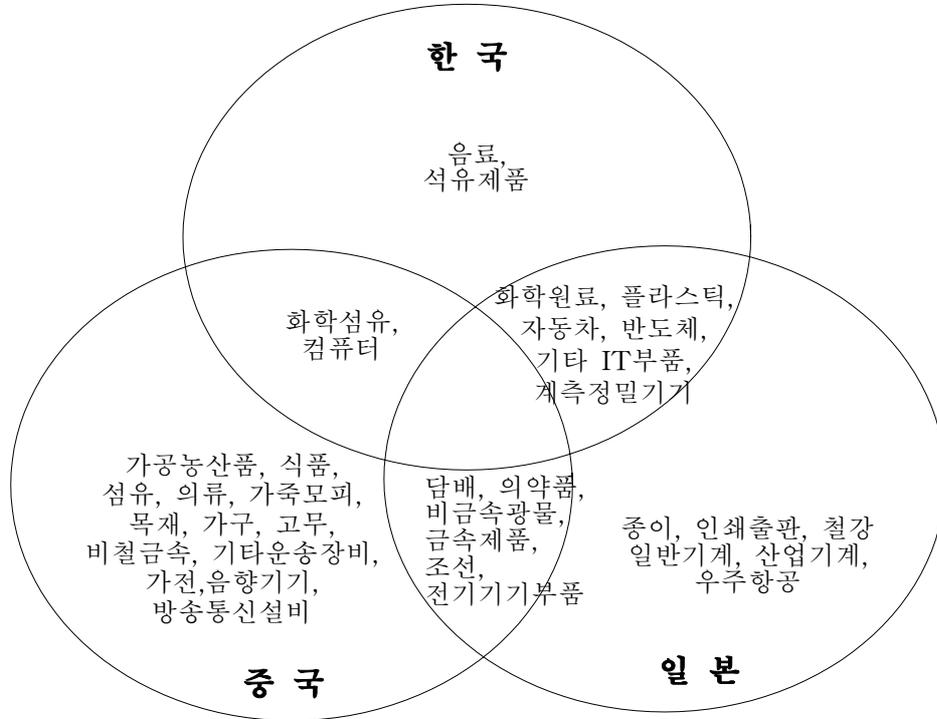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역내교역에서의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치열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다. 한중간에는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에서 경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일간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일간은 전기전자, 조선, 금속제품 등에서 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경쟁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한국·중국·일본의 역내시장에서의 비교우위산업(2005)

(역내시장에서 각국의 RCA지수가 1이상인 업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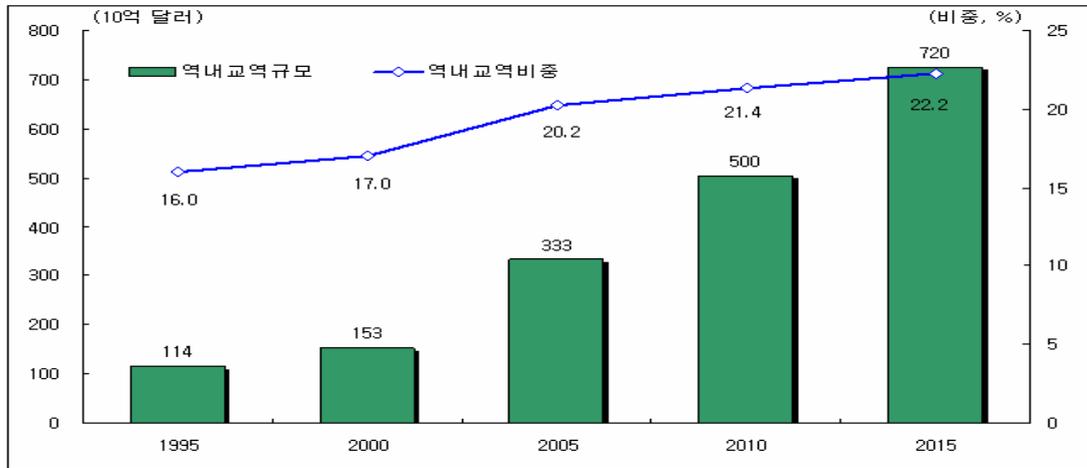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나. 전 망

역내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교역규모는 2005년 3,325억불에서 2015년에는 7,2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역내교역 비중은 20.2%에서 22.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한일, 한중 FTA 등 동북아시아 내의 양국간 또는 동북아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교역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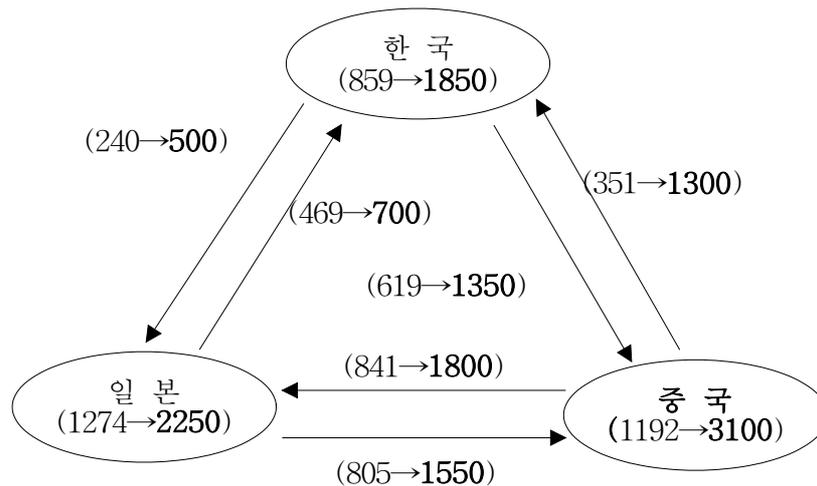
<그림 4-8> 동북아 역내교역 규모 및 역내교역 비중 전망(수출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망.

특히 역내교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역내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1%에서 2010년에는 36%로, 2015년에는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9> 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 전망(2005→20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망.

현재의 역내분업구조는 2010년 이후 장기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기업간 수평분업도 종래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일반기계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제품차별화에 의한 수평분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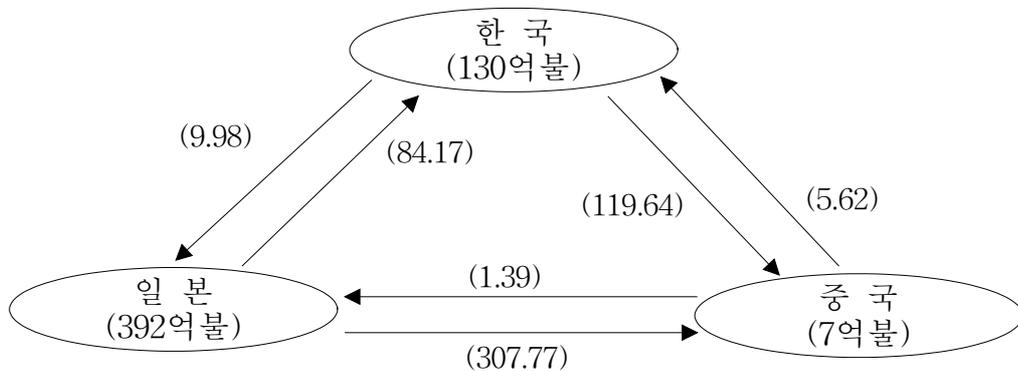
기술수준별 교역구조에 있어서는 IT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역내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단계별로는 부품·부분품, 자본재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동북아 투자구조의 현황 및 전망

1. 현 황

역내투자는 규모면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산업내 분업을 촉진하고 역내교역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9~2004년 기간 중 역내투자 누계액을 살펴보면, 일본은 392억불, 한국은 130억불, 중국은 7억불로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역내투자 총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해외투자 중 역내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4.8%, 한국 23.6%, 중국 1.6%로 한·중·일 3국간 역내투자 규모는 역내교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0> 국별 역내투자 규모 (200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상무부 등.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Inflow)에서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에서 각각 나머지 두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06억불로 전 세계 FDI 총액의 9.4%에 해당하며, 미국 (958억불) 및 영

국 (784억불)에 이어 세계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본은 78억불, 한국 76억불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Outflow)는 309억불로 세계 총액의 4.2%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47억불, 중국은 18억불에 불과하였다.

<표 4-1> 동북아 3국의 FDI

(단위: %)

		GFCF 대비 플로우			GDP 대비 스톡		
		2002	2003	2004	1990	2000	2004
한국	inward	1.9	2.1	3.8	2.1	8.1	8.1
	outward	1.6	1.9	2.4	0.9	5.8	5.8
중국	inward	10.4	8.6	8.2	5.8	17.9	14.9
	outward	0.5	-	0.2	1.3	2.6	2.4
일본	inward	1.0	0.6	0.7	0.3	1.1	2.1
	outward	3.4	2.8	2.8	6.6	5.8	7.9
세계 평균	inward	10.6	8.3	7.5	8.4	18.3	21.7
	outward	9.7	8.2	8.7	8.7	19.7	24.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GFCF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총고정자본 형성)

GFCF 대비 Flow : 당해년도 FDI Outflow(Inflow)/총고정자본 형성 비율

GDP대비 스톡 : 당해 연도 말 FDI Outflow(Inflow) Stock / 당해년도 GDP

<표 4-2> 동북아 3국의 FDI(2004)

(단위: 100만불)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flow	stock	flow	stock
한국	7,687 (1.2)	55,327 (0.6)	4,792 (0.7)	38,319 (0.4)
중국	60,630 (9.4)	245,467 (2.8)	1,805 (0.2)	38,825 (0.4)
일본	7,816 (1.2)	96,984 (1.1)	30,951 (4.2)	370,544 (3.8)
세계 총액	648,146 (100.0)	8,895,279(100.0)	730,257 (100.0)	9,732,233(100.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동북아 3국간 역내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교역 구성비와 투자 구성비는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투자를 살펴보면 역내 투자의 72%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내에서는 역내 수출·수입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산업에서 역내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내 투자를 제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24.5%, 수송기계 16.3%, 기계 10.3%, 화학 10.2%, 섬유 9.6%, 금속 9.4%를 차지, 역내 교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역내투자가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전 망

동북아 3국간의 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산되고, 한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투자에서 중국의 투자도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3국간의 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對중국 투자는 점차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최종재의 조립기지에서 중간재의 공급기지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는 추세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對중국 투자가 완제품 조립 → 모듈제품 조립, 범용부품 → R&D, 핵심부품 제조, 물류·유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 중 중·고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역내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 및 중간재 중심으로 역내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역내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입지우위가 유지되면, 대기업의 중국 생산네트워크 확장 및 중소기업의 현지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對중국 투자 패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IT,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습득 목적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M&A 투자 및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동북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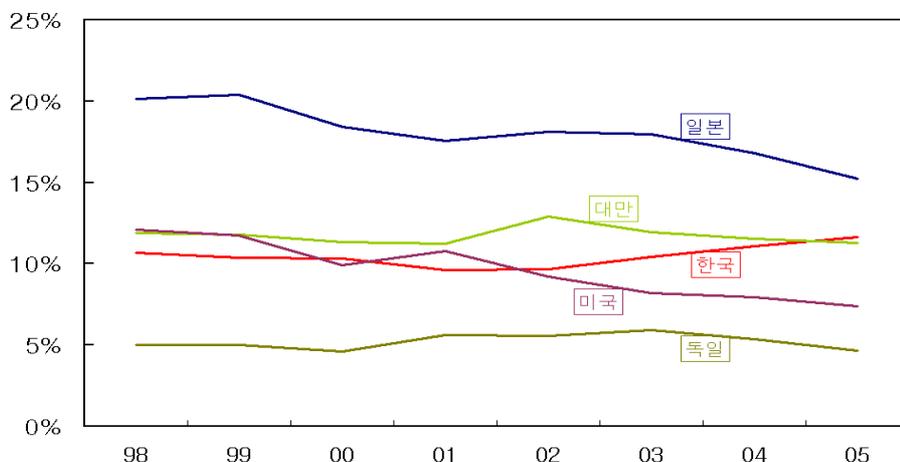
1. 개 관

과거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생산구조는 일본에서 제작된 핵심 부품과 소재가 한국 및 대만으로 공급되고, 이는 다시 가공생산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최종 조립생산되는 단선적인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업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재는 미국 등 역외지역으로 수출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한국 등 본국에서 생산된 최종재 또한 역외지역으로 수출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간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신장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분업구조는 한국과 일본간에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서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구조는 각각 심화되는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시장에서 부품 및 소재의 공급을 둘러싸고 일본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면서, <그림 4-11>에서 보듯이, 2005년 현재 부품·소재 및 원자재가 대부분을 점하는 중국의 수입에서 대만을 제치고 2위로 급속히 부상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1위의 자리에 있지만 그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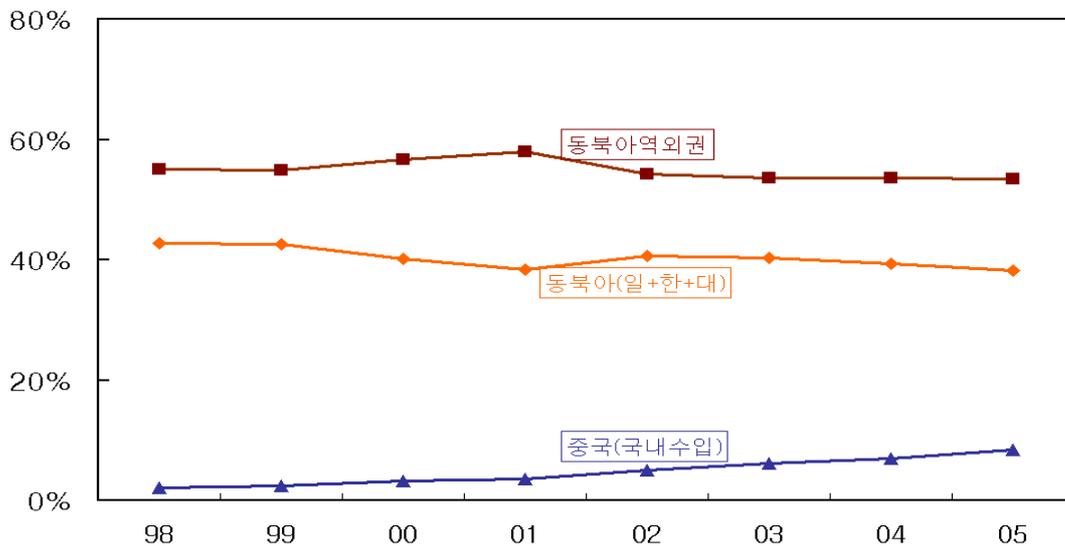
<그림 4-11> 중국의 수입중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처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국가들은 중국의 대외수출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의 주된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12>를 보면, 중국의 수입은 지역권별로 볼 때, 주로 부품 및 소재의 공급에 특화된 동북아권, 원자재의 공급 비중이 높은 동북아 역외권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이들간 비율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중국과 분업관계를 이루는 국가·지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12> 중국의 수입중 지역권별 점유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러나, 지역권 내부적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동북아지역이 중국의 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앞의 <그림 4-11>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중국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 국내수입의 비중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2005년 현재 8.4%로서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중국 내수시장을 지향한다기보다, 역외수출을 위한 가공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산업별 현황 및 전망

① 전자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

가. 현 황

전자산업은 부품의 표준화가 발달하여 생산의 국제화가 가장 진전된 산업이며, 동북아 지역은 IT화에 따른 신제품 생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자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국제분업은 단순조립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부품생산의 현지화와 완제품에 대한 마케팅 기능도 일부를 담당하도록 확대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까지 참여함으로써 종전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변도에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전자산업에서는 기술적 우위와 제품차별화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제품군을 특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과거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수출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 장악력이 높은 가정용 기기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을 둔 전자부품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 신장에 힘입어 전자부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통신기기 제품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경우 해외생산의 확대로 전자부품의 점유율이 높고, 유연한 중소기업간 협업으로 컴퓨터 및 관련부품에서 점유율이 높다. 중국의 경우 모든 품목군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조립생산에 특화되어 전자부품의 수출에서는 낮은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표4-3> 전자산업 부문별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단위: %)

	가정용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부품	
	1983	2003	1983	2003	1983	2003	1983	2003
한국	5.4	5.2	4.2	7.7	2.2	10.4	0.6	4.8
중국	0.4	22.7	0.0	3.3	0.2	12.3	0.0	18.0
대만	6.3	1.7	4.1	7.6	6.0	3.1	4.0	6.1
일본	55.3	16.6	18.2	13.7	24.2	6.9	14.6	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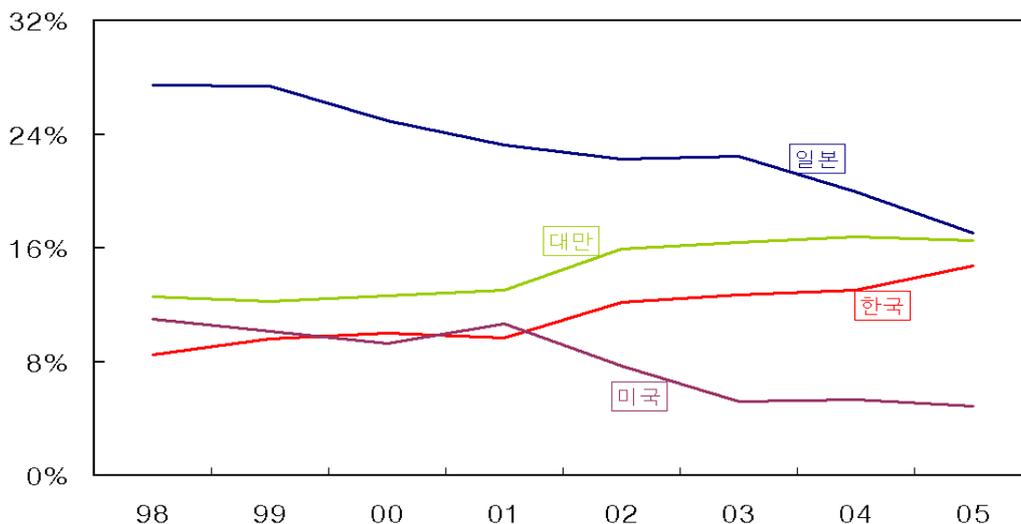
기술력을 기준으로 동북아 국가간 전자산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일본은 우수한 생산기술과 풍부한 원천기술,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반면에, 생산인력의 고령화와 수직적 분업구조의 경직성으로 효율성이 낮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국은 생산기술이 탁월하고 IT화의 공격적 추진으로 내수기반도 튼튼하며 메모리형 반도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빈약하고 전문 부품업체들도 발달해 있지 못하여 고기술의 제조장비를 대부분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조립가공 생산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국적기업들의 생산전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기술력의 배양에서도 큰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전자제품 및 부품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일본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과 대만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상승은 중국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공급의 증가와 함께, 무선통신기기 등 신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2001년의 IT경기 하락으로 점유율이 하락한 후 낮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3>은 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의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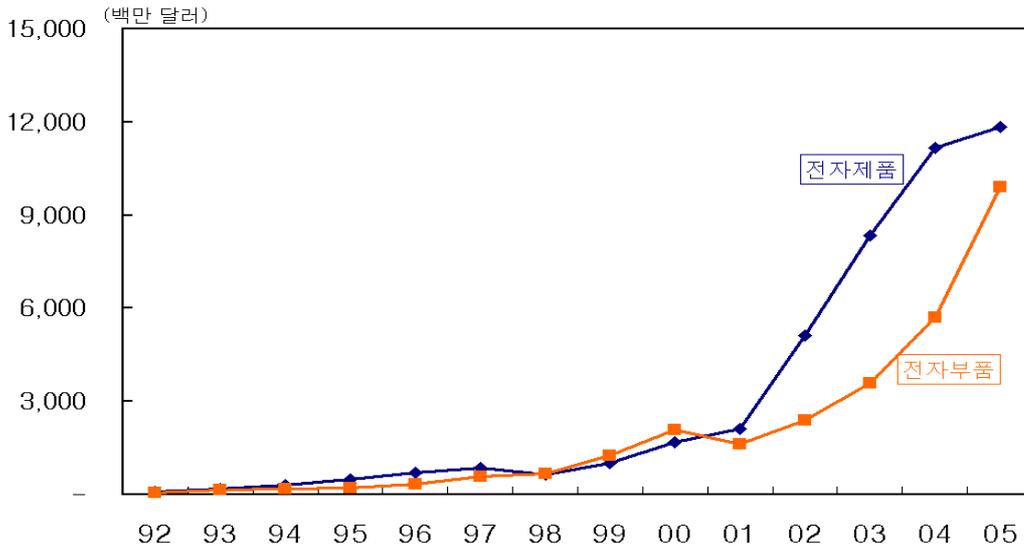
<그림 4-13> 중국의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 점유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특히, 한국 전자제품 및 부품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림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4-14>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편, 한국의 전자부품 수입구조는 최근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전자부품 수입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는 대신, ASEAN 등 개도국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부품 수입 중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의 비중은 1990년 77.2%에서 2000년 58.0%, 2005년 43.3%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선진국에 대한 주요 핵심부품의 의존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하며, 저기술의 범용성 부품은 비용우위가 있는 개도국 수입으로 대체하여 중국 등에 대한 부품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자산업의 수출입구조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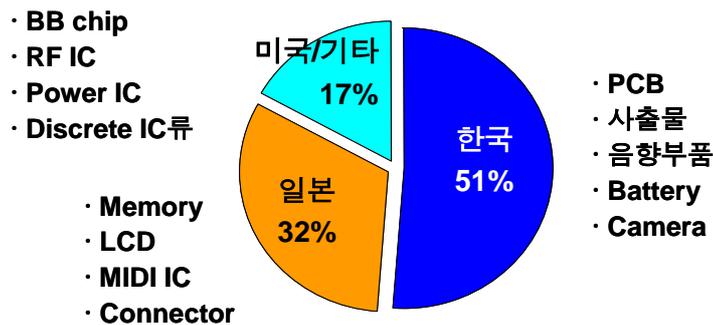
나. 전 망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전자산업의 국제분업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신장됨에 따라, 현재보다 수직적 분업구조가 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간에 원가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중국

현지에서의 부품조달을 확대해 갈 것이다. 모토로라의 경우 생산은 물론 R&D에서도 현지화를 추진하여, 중국에 18개의 R&D센터를 설립하고 650여명의 연구인력을 두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동북아 지역 전자산업의 국제분업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는 지속적으로 중국을 앞서는 수준의 기술력 격차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핸드폰 산업의 부품조달 구조 >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급핸드폰 A의 경우, 국내에서 약 51%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메모리, LCD 등 핵심부품은 일본(32%)에서, BB Chip, Power IC 등의 핵심부품은 미국 등 기타국(17%)에서 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고급핸드폰의 경우 중국/대만산 부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중국/대만 부품 없음.

한편, 중국 현지법인에서 핸드폰을 생산하고 있는 B사의 경우 한국 본사로부터 부품의 약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한국에서 생산된 고급부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20% 정도의 부품은 계열사, 동반 진출한 한국 협력회사, 중국 현지업체 등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업체로부터의 부품조달은 기술력 등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나, 향후 중국시장에서 노키아 등 외국기업, TCL 등 현지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비용절감 차원에서 점차 현지조달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 현지 임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휴대폰 업체의 성장, 외국계 회사의 현지부품 조달 등으로 중국 부품업체의 기술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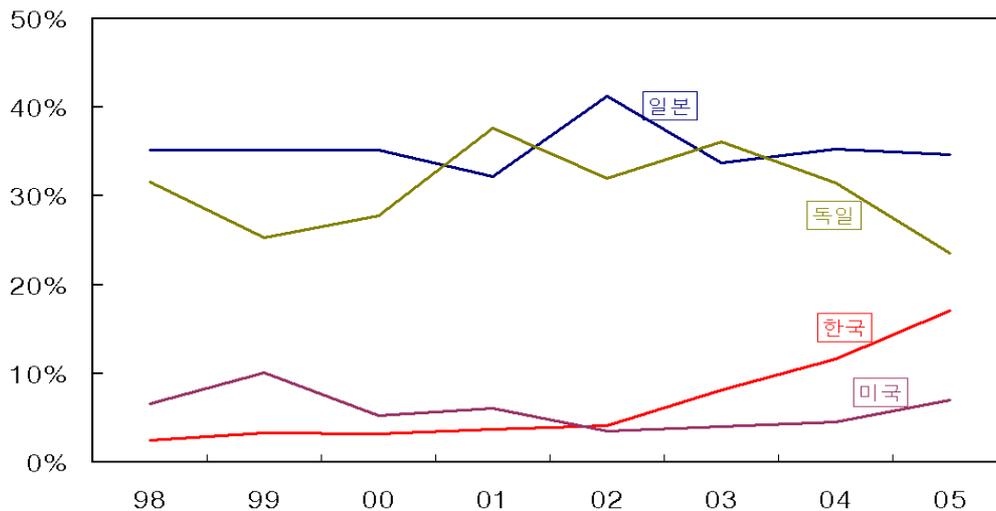
②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가. 현 황

거대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중국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중심이 점차 중국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중국에는 전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업체 및 부품업체들이 진출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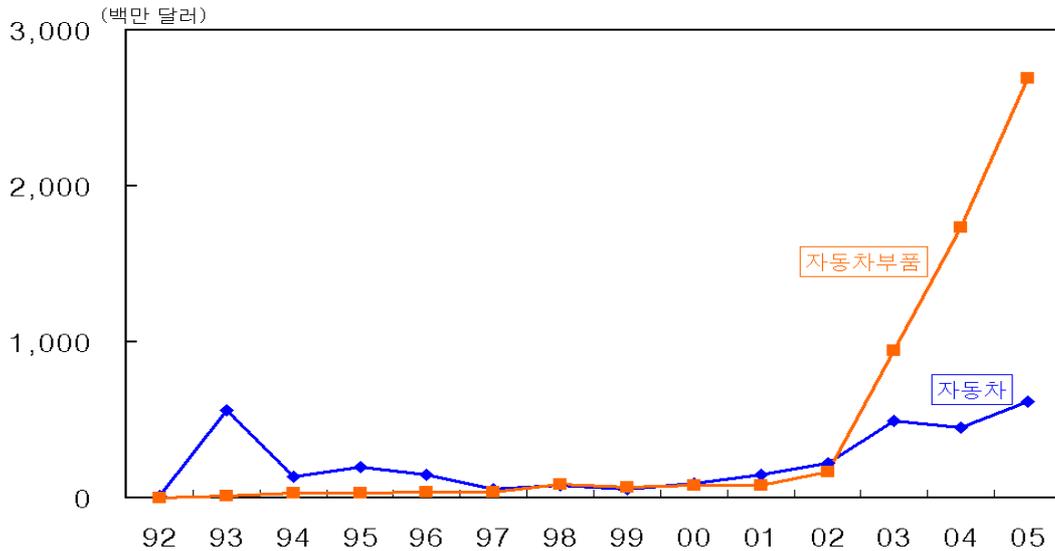
<그림 4-15>를 보면, 중국의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수입국 중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전자산업과 달리,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과 경합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02년 '北京現代'의 설립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부품공급이 급격히 증대된 것에 기인한다(<그림 4-16> 참조).

<그림 4-15> 중국의 자동차 제품 및 부품 수입 점유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4-16>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제품 및 부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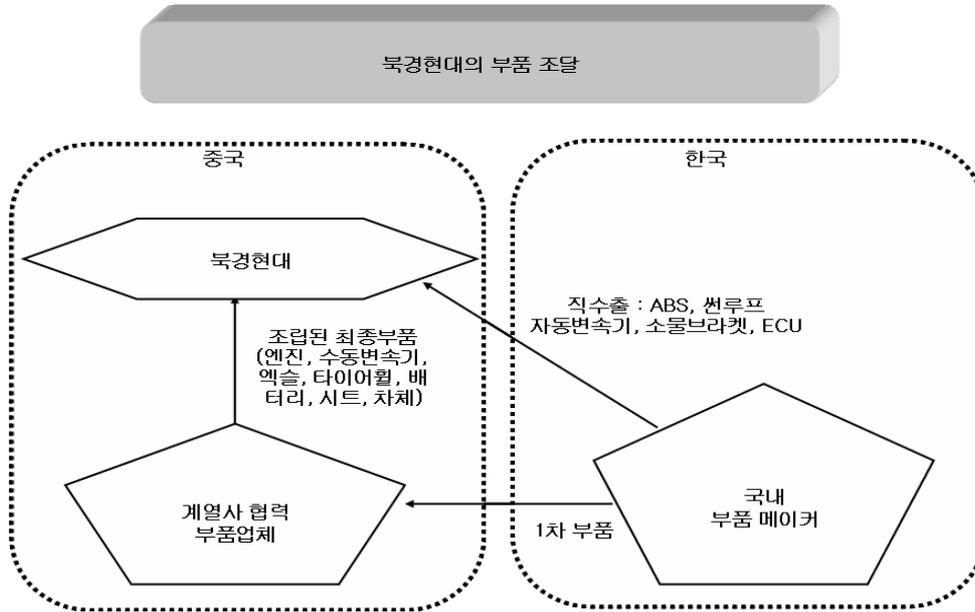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과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주요 핵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였으나,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한일간 국제분업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반면에 중국과의 분업관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북경현대의 현지부품 조달률은 공식적으로 75%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동반 진출한 한국계 부품업체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되는 부품소재까지를 고려하면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은 40% 수준에 그친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지부품 조달비율을 강제적으로 부과하였으나, 북경현대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계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권유한 것이다. 북경현대에 부품을 조달하는 현지 부품업체 수는 79개사인데, 이 중 56개사는 한국계 업체(현대 모비스 포함)이며 나머지 23개 업체 중 일부 순수 중국업체를 제외하면 다국적기업들과 합작투자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7> 북경현대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



자료: 현대자동차.

그러므로, 주요 핵심부품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직수입하거나 현지 한국계 부품업체를 경유하여 조달받는 형태로 한중간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26.9억 불(2005년)로서, 중화학공업분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100만 불 당 14.5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한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화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구조 또한 단순한 상태에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자동차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현지생산 활용방식은 2001년까지는 주로 일본계 부품업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부품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조달받는 방식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중간재 및 기초소재조차도 중국 현지에서 조달받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조달받는 방식이 20% 수준의 원가절감 효과에 그치는 반면, 중국 현지에서 조달받게 되면 30% 수준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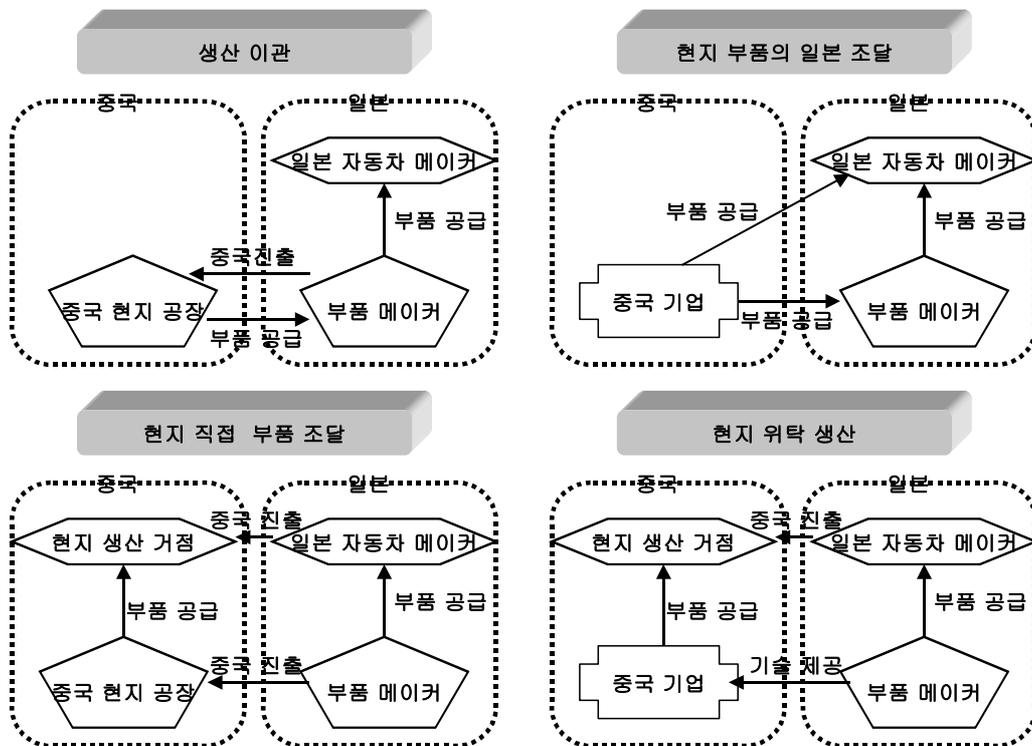
1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표 4-4> 일본 자동차업체의 부품조달방식과 원가절감 효과

부품조달 방식	원가절감
■ 중국 자재 → 일본내 부품공장 → 일본내 완성차 공장	10%
■ 일본 자재 → 중국 현지 부품공장 → 중국 현지 완성차 공장	20%
■ 중국 자재 → 중국 현지 부품공장 → 중국 현지 완성차 공장	30%

최근 스미토모電裝, 칼소닉 칸세이 등 일본의 핵심 부품업체들이 자국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다. 일부 부품업체들은 노동집약적 부품에 그치지 않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까지 중국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도요타계열의 아이싱공업은 카오디오 구성부품의 해외생산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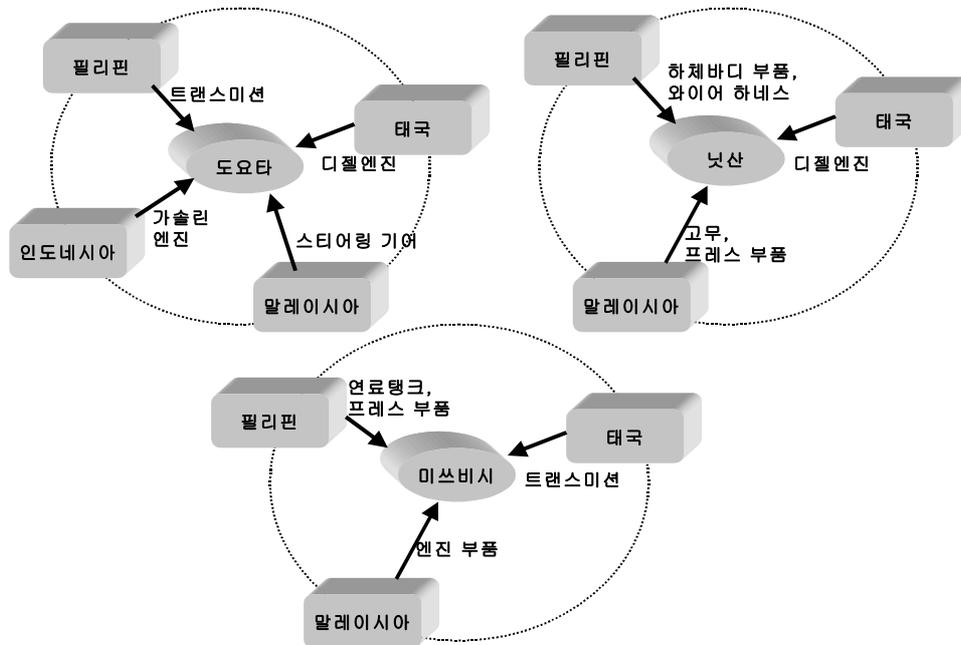
<그림 4-18>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부품조달 방식



자료 : FOURIN, 2003.

일본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생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국과의 국제분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ASEAN을 일본 해외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각 국가별로 특정부품의 생산을 특화시킨 결과, 생산규모가 3년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규모의 경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ASEAN 국가간에 체결된 '부품 상호보완협정'은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부품생산의 글로벌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림 4-19> 일본 자동차업체의 ASEAN과의 부품생산 국제분업구조



자료 : FOURIN, 2003.

중국정부의 현지부품 구매확대 정책과 현지생산 다국적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조달률이 상승하고 있다. 2003년 40% 수준이었던 부품의 현지조달률은 2005년 45~5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4월, 중국정부는 현지 부품조달률이 40%수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완성차 가격의

60%를 상회하거나 3개 이상의 핵심부품을 내포하는 부품모듈에 대해서는 완성차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 중국 진출 일본 자동차회사의 현지화 전략 >

혼다는 완성차 현지 공장의 현지 부품 조달률을 70% 내외로 확대하여, 실린더, CVT 등을 현지 조달하고, 엔진과 변속기는 합자회사인 東風혼다 발동기에서 조달한다. 일본계 부품업체 선정시에는 QCDDME라는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선정하여 장기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요타는 완성차 현지 공장의 부품 현지 조달률을 45% 내외로 확대, 대여도방식*에 의해 프레스관련 부품, 도어, 핸들 등 저부가가치 부품을 현지조달한다. 그러나, 핵심 기능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조달함으로써 기술수준 유지 및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대여도 방식 : 기술유출의 방지 등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직접 부품을 설계하는 방식. 부품의 설계를 부품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승인도' 방식이라 함.

중국정부가 각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종합지수에 의하면 미국 1.27, 일본 1.25, 독일 1.12, 한국 0.86, 중국 0.53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산업의 실제 성과를 보건대, 이 같은 평가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작성된 지수일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규모의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들의 난립에 있다고 보고, 기업간 통폐합을 통한 대량생산체제의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독자모델이 개발되지 못하므로, 해외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제휴 등으로 제품개발 능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자동차 메이커의 도약 : 독자모델과 브랜드 확보 >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上海汽車는 최근 2010년까지 30개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세계 톱 10위'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上海汽車는 2004년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영국 MG 로버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한편, 치루이(奇瑞)는 최근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업체를 인수했으며, 독자 브랜드 승용차개발을 위해 48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전 망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05년 570만대 수준에 있으나, 2015년에는 약 1,0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측면에서도 2015년 경에는 1,000만대 수준에 이르러 미국(1,800만대)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현지생산 목표가 '비용절감'보다는 '시장추구'로 전환될 것이고, 현지시장에서의 현지화를 통한 점유율 경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약 1/7~1/5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핵심부품의 수입, 전력, 용수 등 인프라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최종 생산원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다¹⁶⁾.

전자산업과 달리,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독자기술 및 독자모델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다국적기업들의 대중 현지화 확대, 중국 자동차업체의 M&A를 통한 기술 추격 등에 따라 중국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계속 향상될 전망이다.

16) 북경현대, 북경만도, 천진일기도요타 임원 현지 인터뷰(2006년 6월).

< 중국 제11차 경제5개년규획('06-'10)중 자동차산업 분야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제11차 경제5개년 규획기간 중 승용차 독자모델 개발과 핵심 부품산업 발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토종기업에는 완전한 독자모델(독자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既진출한 외자기업에는 모델변경을 강요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외자기업 중심의 발전체제를 토종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종기업의 독자모델 개발능력 확보를 최대 목표로 설정,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의 주요 목표치로는 자동차 보유량 5,500만대, 40대/1,000명, 자동차 생산량 900만대/년, 자동차산업 부가가치/GDP 점유율 2.5%, 자동차 생산량 10% 수출 (오토바이는 5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자모델 개발 및 새시설계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엔진 및 핵심 모듈 기술 국산화, 부품생산업체의 국제화 및 유류 소모율을 현재보다 50% 절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산 고유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MPV, SUV 등 유사 승용차 포함)의 시장점유율을 2005년 43%에서 2010년 60%로 제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조달과 세제상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부품조달 전략 : GM의 사례 >

GM은 개별 자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본부차원에서 부품조달을 결정하며, 특정부품에 대해 최적의 가격,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내어 전세계 GM자회사들에게 공급하는 글로벌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차종별로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곳에서 R&D 및 디자인 개발 기능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차종별로 R&D 본부를 비교우위가 있는 세계 각국, 즉 미국(트럭), 유럽(중대형 승용차 및 럭셔리 승용차), 한국(소형 승용차), 호주(후륜구동 승용차), 브라질(소형 픽업트럭) 등 전세계로 분산시켰다.

특히, 상해에 소재한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부품조달 임원 인터뷰에 따르면('06.6월), 한국 부품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현재 한국업체들에게 부족한 글로벌 시장접근능력(Global reach)을 보완하면, 한국이 급성장하는 중국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급부품의 조달기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③ 기계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가. 현황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수입품목 중 전자제품 및 부품 다음으로 수입규모가 큰 품목은 산업화에 필요한 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이다.

<표 4-5>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별 규모 및 구성비

(단위: 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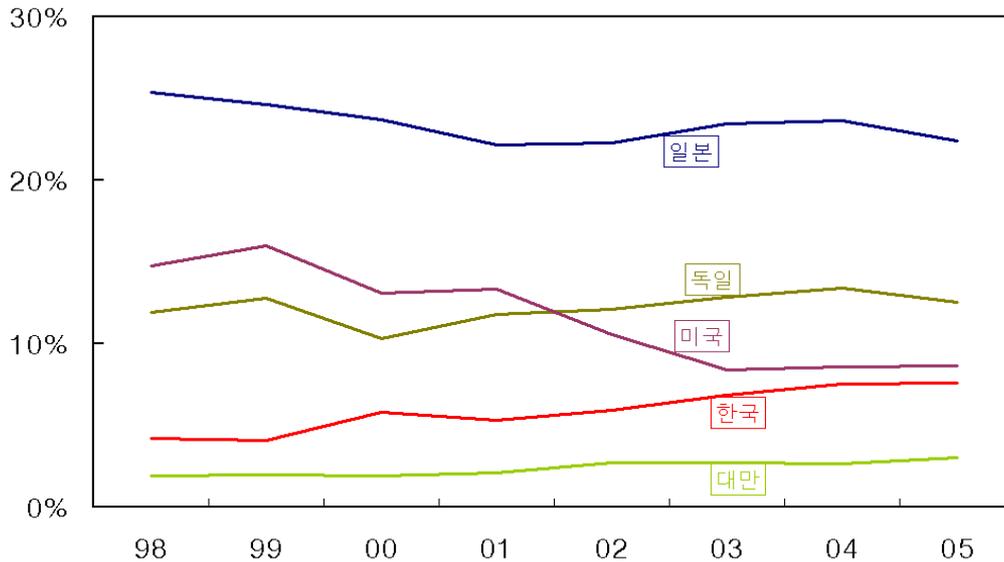
	총수입 (구성비)	전자제품 및 부품	산업기계 및 부품	석유	자동차 및 부품
2005년	660,222 (100.0%)	174,913 (26.5%)	96,418 (14.6%)	64,239 (9.7%)	12,271 (1.9%)
순위	-	1위	2위	3위	10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에 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자제품 및 부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자동차의 순이며 산업기계는 낮은 순위로 밀려 있어 유망한 시장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산업기계 및 관련부품의 수출이 높은 국가들은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선진공업국들이다. <그림 4-20>에서 나타나 있듯이, 한국은 일본·독일에 비해 대 중국 기계류 수출이 낮은 수준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과의 격차가 신속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계 수출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낙후와 숙련인력 양성 부진에 기인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핵심부품의 65~80%를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0> 중국의 산업기계 및 부품 수입의 주요국별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나. 전 망

최근 중국 업체들이 설비확장 과정에서 한국산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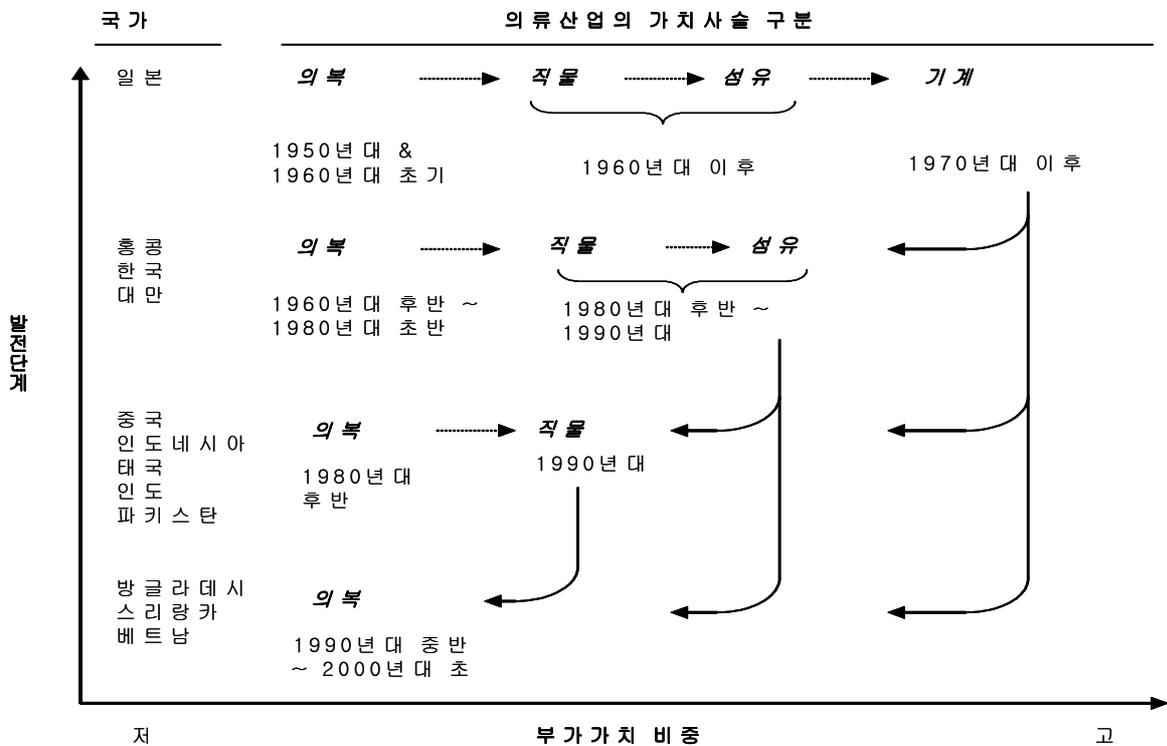
특히, 중국 공작기계 및 건설기계 시장은 수요 기반인 자동차, 건설 시장 등의 급성장으로 연간 1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중위 기술 수준의 한국산 기계설비(중고품 포함) 등 자본재의 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섬유·의류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가. 현황

의류산업은 가치사슬의 분화에 따른 국제분업이 일찍부터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4-21>은 이러한 의류산업의 분업구조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까지 의류산업의 수출을 선도하였던 일본은 고부가가치 고급의류 및 섬유기계에 특화하고, 저부가가치 생산 활동은 후발국으로 이전하였다. 일본에 이어 의류산업을 선도한 한국, 홍콩, 대만 등도 1980년대 말부터는 의복 제조 부문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였다.

<그림 4-21> 아시아 의류산업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



자료: Gereffi(2005).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는 수출구조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1980년대 세계 의복수출의 1/4을 차지한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비중은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이를 중국이 대신하고 있다. 직물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 등 저임금국가로 이전 중에 있다.

<표 4-6> 의류제품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단위: %)

	1973	1983	1993	2003	연평균증가율 (1973~2003)
세계	100.0	100.0	100.0	100.0	10.3
미국	2.6	2.3	3.8	2.2	9.7
EU	47.1	39.0	30.1	24.0	7.9
일본	3.4	2.0	0.5	0.2	0.5
Asian NIE1	22.8	26.7	14.1	6.1	5.6
Asian NIE2	1.0	2.7	5.5	3.3	14.9
한국	6.4	8.2	3.9	1.5	5.0
중국	1.8	5.2	15.0	22.3	20.1
대만	3.6	5.6	2.7	1.0	5.6

주: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ASIAN NIE1 =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Taiwan

Asian NIE2 =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표 4-7> 직물제품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단위: %)

	1973	1983	1993	2003	연평균증가율 (1973~2003)
세계	100.0	100.0	100.0	100.0	6.4
미국	5.5	5.3	4.8	6.7	7.1
EU	54.5	52.1	42.7	38.2	5.1
일본	11.7	13.6	6.9	4.7	3.2
Asian NIE1	5.9	7.9	19.5	14.3	9.6
Asian NIE2	0.5	0.8	1.8	2.1	11.3
한국	1.9	2.7	9.1	7.5	11.3
중국	3.1	2.7	4.5	10.0	10.6
대만	1.8	4.1	8.1	6.2	10.9

주: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국의 섬유류제품 수출은 가격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낸 바, 1999년 59억 불에서 2005년 36억 불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섬유업체들의 중국 현지생산 확대에 인하여 중국에 대한 섬유사 및 섬유직물 등 원자재의 수출은 1999년 2.5억 불에서 2005년 4.8억 불로 증가하고 있다.

나. 전 망

<표 4-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한국 의류제품의 중국 수출은 규모면에서는 미국, 일본에 뒤지고 있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한국산의 고급품질 및 패션상품의 이미지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연안지역의 소비자들은 이미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매력 증대로 인하여 문화·오락 등 소득탄력적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천진일기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소형차에도 천연가죽 시트를 요구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놀랐다고 한다¹⁷⁾.

<표 4-8> 한국 의류제품의 주요국 수출 실태

(단위: 백만 불)

	총수출	미국	일본	중국
1999년	5,889	2,437	1,255	245
2002년	4,938	2,252	706	360
2005년	3,564	1,259	520	479

주: MTI 44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따라서 장차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될 경우, 한국산 고가품의 수출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17) 천진일기도요타자동차 현지임원 인터뷰(2006년 6월).

다. 섬유산업의 경우 향후 우리가 첨단 新섬유소재 기술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역량 강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중국 수출의 증대에 힘입어 수출산업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韓流 등의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류와 관련된 고급 브랜드의 개척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패션 의류제품 선호도는 1위(중국), 2위(프랑스), 3위(한국), 4위(이탈리아), 5위(미국), 6위(일본) 순으로 알려져 있다.

< 중국 고급패션 브랜드 시장의 진출: EXR의 사례 >

EXR은 한국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패션의류·스포츠 캐주얼·신발 브랜드로서, 2001년 기업설립 후 2004년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제치고 국내 1위로 부상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 상해사무소 개소, 2005년에는 중국법인 설립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고, 중국진출 2년만에 시장점유율 3위에 도달하는 성공(1위: Nike, 2위: Adidas)을 이루었다. 2005년 중국법인의 매출액은 80억원으로, 2년만에 51개 매장(90% 정도가 백화점 입점), 종업원은 약 80명(한국 파견 인원 8명) 규모로 확장하였다.

EXR은 고가 패션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여, 중국에서의 판매가가 한국의 동일제품보다 10~20%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현지생산은 없으며, 중국현지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10%(한국에서는 6%)에 달한다.

EXR은 향후 5년 이내에 중국 매출액이 한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대비한 생산, 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현지화를 추진 중에 있다. 패션산업의 특성상 현지 정서에 밀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R 상해법인 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2006년 6월), 한국 패션업체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능력이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이며, 향후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韓流를 잘 활용할 뿐 아니라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능력, 마케팅, 브랜드 홍보, 과학적인 고객관리(CRM) 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는 제조업, 서비스산업, 농업 등 산업별로 생산, 고용, 교역 및 투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차별적 영향이 산업별 명암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주요 산업별 영향

1. 제조업

급성장하는 중국과의 교역증가의 영향으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공업 부문은 저임금을 강점으로 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화학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제조업 내 중화학과 경공업간의 양극화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정밀기기, 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對中 교역의 성장기여도가 높고 의류, 신발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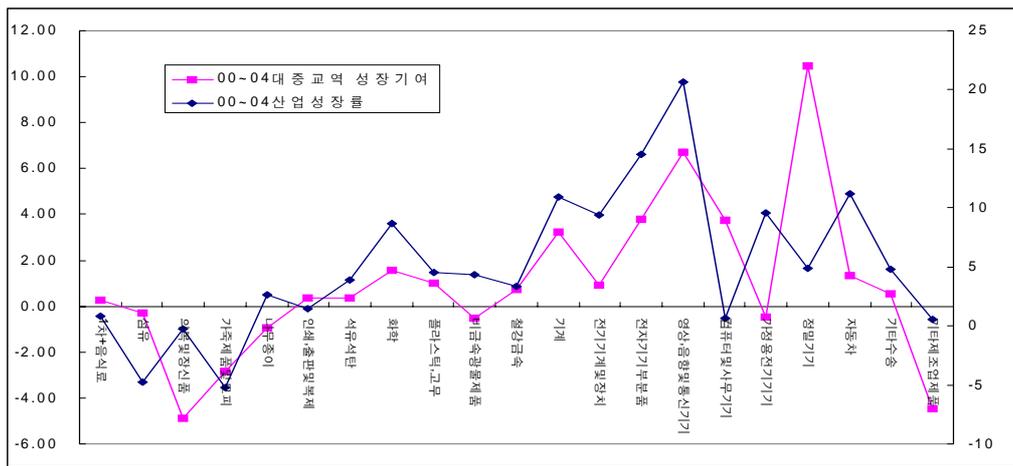
<표5-1> 對中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양극화 ('00~'04)

부 문		성장률	對中교역의 성장기여도(%p)	對中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양극화 1	제조업(A)	7.0	1.64	48.9
	서비스(B)	4.3	0.32	
	격차 (A-B)	2.7	1.32	
양극화 2	중화학(C)	8.3	2.14	37.9
	경공업(D)	-1.1	-1.42	
	격차 (C-D)	9.4	3.56	

자료 : KIET(2005).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중국의 수출품목이 고도화될수록 기술집약적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깝지만, 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젊은이들의 제조현장 기피로 현장인력의 고령화 및 후계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교역확대는 한국에는 중국기업 및 중국진출 다국적기업의 고급 부품소재 조달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바,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기술집약적 핵심 부품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경우 한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1> 산업별 성장률과 對中 교역 성장기여도의 분포



주 : 왼쪽 눈금은 성장기여도, 오른쪽 눈금은 산업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KIET(2005).

이러한 부품 및 소재시장의 확대는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하청생산의 연쇄화로 기술력 배양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적자원 고도화(예: 대졸 학력자 비중 증대),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의 확산과 함께 지역별 혁신클러스터가 중국의 수요와 결합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혁신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2. 서비스산업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인 바,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디자인, 마케팅, R&D, 유통·물류 등 제조업과 융합된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단순 조립가공'에서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관리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화는 단순 생산공장의 역할에 국한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디자인, 마케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에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공급을 담당할 수 있다. 이미 중국 제1의 PC업체인 레노보(Lenovo)는 한국이 디자인 강국임을 인정하고, 자사의 디자인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⁸⁾

또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R&D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R&D 능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도 중국에 한 발 앞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설립 지원, 외국기업 R&D센터의 유치 등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유통·물류 역시 GPN 확대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 및 중국내수시장 진출 차원에서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제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기업지원 서비스업 이외에 환경, 에너지 등 인프라성 서비스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18) 현지임원 인터뷰; 2006.6월.

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의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전력부족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原電 기자재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류의 영향이 큰 문화와 의료, 교육, 레저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우리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문화 및 콘텐츠 산업의 경우, 이미 韓流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6대 癌(위, 간, 폐, 대장, 유방, 자궁) 및 미용·성형·치과 등 의료서비스 역시 중국 및 동남아의 상류층을 겨냥하여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우 현재 중국 관광객이 2,000만 명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1억 명으로 전망되는 등 중국의 관광 수요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유치는 향후 우리의 레저·관광 산업이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교역확대는 한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수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인재에 대한 교육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사례 : 유통시장 및 의료시장에서의 성공 >

B홈쇼핑은 '03.8월, 중국의 미디어업체인 A사와 합작법인 설립 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04.4월부터 A사 보유 채널을 이용하여 매일 저녁시간대에 5시간씩 방송하며, 최근 매출 증가 및 제품 다양화로 24시간 생방송 실시 준비 중이다. 방송을 시작한 후 2년차인 '05년 매출액 420억원(韓貨)을 기록하였으며, '06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오프라인(off-line) 판매채널도 확보하고, Mobile Commerce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TV판매 제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카탈로그 판매를 시작, 무점포 유통으로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향후 소득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는 인근의 도시들로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으로 있다.

예치과는 '04년 30억원을 투자하여 '예 메디칼 상해(주)'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했다. 중국 상위 1%의 성형외과, 치과 등 최고급 Luxury 클리닉을 지향하며, 30~50대 고소득층 여성을 주 타깃으로 설정했으며, 한국이 미용성형 강국임을 내세워 치료수가를 한국보다 높게 설정하여 성공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의 경우 한국에서는 130-150만원인 반면, 상해에서는 192만원으로 책정했고, 치열 교정의 경우 한국에서는 400-500만원이나, 상해에서는 600만원으로 치료수가를 책정했다. 현지에서 의사 및 경영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현지화를 추진했으며 개원 5개월만에 손익분기점 도달, 상해 위생국 지정 5대 모범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베트남 호치민(胡志明)市에도 예 메디컬센터를 설립했으며, 향후 중국 전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3. 농 업

한·일 간 농산물 교역은 한국의 對日 수출이 대일 수입액을 초과하고, 중국의 對韓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로 국제 분업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연도별 변동 폭이 크지만, 노동집약적 농산물 생산에 특화하여 '03년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한국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00년 1.1%에서 2004년 0.8%로 하락하였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고(2004년 1.3%) 이마저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농산물 교역구조는 중국이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생산에 특화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이 거의 없는 불균형적 구조이며, 한국은 중국이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고품질 과채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표 5-2> 한·중·일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구분	한 국		중 국		일 본		합계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수출총액 (농산물수출액)	172,268 (1,532)	253,845 (2,085)	249,200 (13,353)	593,320 (19,333)	449,167 (1,534)	589,306 (2,048)	870,635 (16,419)	1,436,471 (23,466)
수입총액 (농산물수입액)	160,841 (8,450)	224,463 (11,220)	225,090 (10,516)	561,230 (26,512)	355,986 (45,044)	474,148 (56,055)	741,917 (64,010)	1,259,841 (93,787)
무역수지 (농산물 수지)	11,427 (-6,918)	29,382 (-9,135)	24,110 (2,837)	32,090 (-7,179)	93,181 (-43,510)	115,158 (-54,007)	128,718 (-47,591)	176,630 (-70,32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이 실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소비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산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농업은 역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품 차별화와 틈새시장 개척, 품목별 국제 생산네트워킹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공산품에 비해 생산 공정이 단순한 농산물의 특성상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체제가 전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중·일 농업의 3국 간 분업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제품차별화와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하거나 기능성을 강화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농업부문의 국제 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안보, 물·공기 정화, 토양 보전, 농촌의 활성화 등 농업의 공공재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농업기술협력, 지역식량시스템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유럽 40-60헥타르, 미국 185헥타르인 데 반해, 중국 0.4헥타르, 한국 1.4헥타르, 일본 1.6헥타르로 동북아 3국이 모두 빈약하여, 식량 수급에 큰 변동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기술협력 및 지역식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절. 해외투자자와 산업공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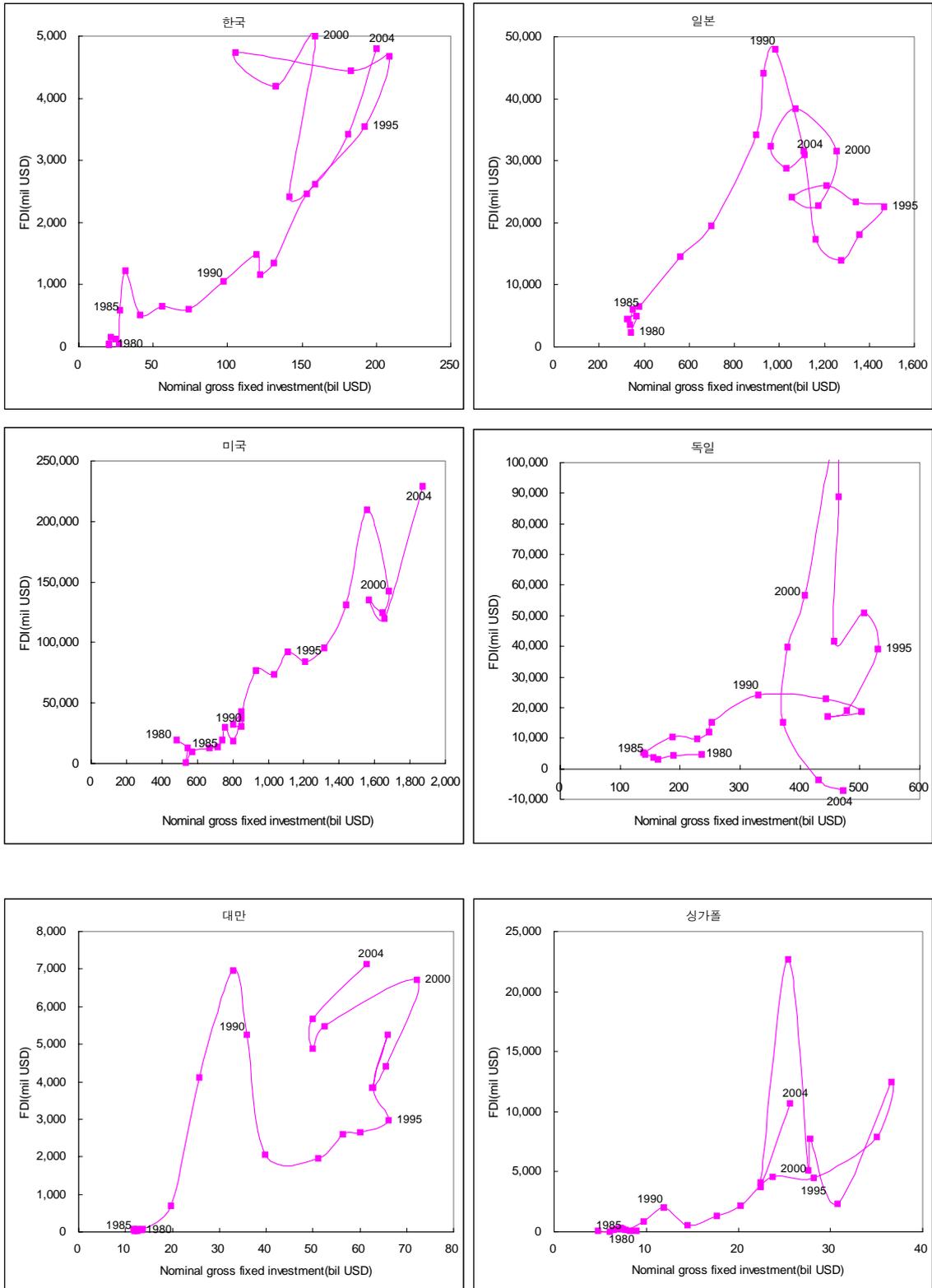
산업공동화에 대한 논의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제조업 비중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거시적으로, 해외직접투자자로서 인한 산업공동화 여부는 해외직접투자자와 국내투자자 사이의 대체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2>는 대표적인 국가별로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국내투자는 답보상태인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수년간은 국내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가 함께 확대하는 반면, 일본은 최근 해외공장을 다시 자국 내로 이전하는 “일본U턴”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독일, 대만, 싱가포르는 대체로 국내투자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촉발하는 보완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장비 등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중간재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의 해외투자는 동아시아를 조립·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하여 현지수요 및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일본으로의 역수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반면, 제품개발·시제품 생산 및 자본재·중간재 공급기지로서의 기능을 국내에 남겨놓음으로써, 일본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내 생산체제의 외연적 확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보완적일 수 있었다(<참고 1>). 이는 부품·소재 부문의 강점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공급사슬에 따른 수직분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중국 투자 확대는 자국내 생산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Mizuho은행에 따르면 일본경제에 '03~'10년 기간에 0.8%p 성장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Mizuho은행, 2005).

반면, 독일의 경우 부품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률이 저하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 그 이유에 대해 뮌헨대 Ifo경제연구소장인 H. W. Sinn 교수는, “Made in Germany”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 생산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은 증가하지만, 국내 경제에의 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예를 들어, Porsche의 Cayenne은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최종 조립·생산되고 있어 100% 독일수출로 집계되지만, 부품의 88%는 슬로바키아에서 조달됨에 따라 실제로는 12%만이 독일의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되고 있다.

<그림 5-2>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추이 국제비교



자료 : KDI(2006).

<참고 1> 일본: 해외투자는 국내생산체제의 외연 확대로 연결

일본기업의 국제화는 수출 → 직접투자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두 차례의 '엔高'는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진출을 촉발시켰다. 제1기 엔高(1985년 플라자 합의 후 2년간 39% 절상) 및 제2기 엔高(1991~95년 5년간 38% 절상)의 여파로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투자 및 현지생산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일본내 생산체제의 外延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일본은 제품개발·시제품생산 및 자본재·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한다.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조립·생산기지는 현지수요 및 제3국 수출이 주된 기능이며, 현지 생산품의 일본에의 역수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조립·생산기지의 독립성 및 현지화 정도는 歐美기업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일괄이전이 아닌 공정간 분업에 기반을 둔 산업 내 수직분업의 확대를 볼 수 있으며, 공급사슬에서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내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일부 일본기업은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를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의 자동화 및 모듈화로 제조원가 중 인건비 비중 저하, 일본 내 부품·소재 집적지에서의 조달 용이성, 해외투자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 등지에서의 현지생산이 인건비는 저렴하나, 종업원의 높은 이직률 및 낮은 숙련도로 생산성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일본U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내 투자(생산설비)와 해외투자(핵심기능)를 동시에 확대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쉐우드는 휴대용 MD player를 말레이시아에서 야마가타(山形)縣으로 생산 이관했으며, 일본의 높은 생산성(5배)으로 임금·地價 등 요소비용 격차를 극복했다. Sony는 캠코더 공장을 일본내에 신축했는데, 이는 해외 수출제품의 핵심부품 중 40% 이상을 일본 내에서 조달하므로, 일본 내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 2>

독일: '바자경제' 논쟁

독일은 상품수출 세계1위, 총수출 세계2위의 세계수출 챔피언이지만, 성장을 및 실업률 측면에서 유럽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실적과 국내 경제 사이의 괴리는 독일에서 「바자경제」 논쟁을 촉발하였다. 여기서 '바자경제'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생산없이 오직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처 역할만 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독일에서의 바자경제 논쟁은 한국·일본·대만에서의 산업공동화 논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뮌헨대 Ifo경제연구소장 H. W. Sinn 교수는 "Made in Germany"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 생산의 해외이전으로 수출은 늘지만 국내경제에의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예를 들어, 포르쉐의 Cayenne(SUV의 일종)는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최종 조립생산되고 있으나, 최종가의 88%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은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조달되었다. 따라서 Cayenne 1대 수출은 100% 수출통계로 집계되나, 실제로는 12%만이 독일의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되는 것이다.

독일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8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및 아시아지역 진출에 이어, '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중소기업들도 동유럽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확대되었다. 동유럽지역 투자 확대에는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04년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독일에서는 €27.60(덴마크에 이어 유럽 내 2위)인 반면,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인건비의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헝가리 €4.53, 슬로바키아 €3.61, 폴란드 €3.29)

독일 제조업 생산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률은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03년중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율은 34.0%로 '70년의 40.2%에서 6.2%p 하락했다. 독일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는 고용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임금 수준을 감내하지 못하여 외국으로 나간 기업 등 경쟁력 상실 부문에서 방출된 인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실업이나 準실업 상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현재 독일기업의 해외투자는 해외 일자리 440만개를 창출한 반면, 1995~2004년 기간 중 독일 제조업 고용감소는 109만개, 비제조업 고용은 17만개 감소로 총 실업은 126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3> 싱가포르: 성장의 제2엔진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싱가포르는 2003년 2월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계시키고 전세계의 고도 기술자, 경영인, 창의적 인재를 끌어들이며 우수인력의 아시아센터로 발전시키는 'Remaking Singapore 전략'을 발표했다. 즉, "세계일류도시(leading global city)"의 비전을 실현할 전략으로 ① 개방화의 확대, ② 경쟁력 및 유연성 제고, ③ 기업가정신의 제고, ④ 성장의 양축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⑤ 우수인력의 양성, ⑥ 구조조정 등 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성장의 제2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은 비용절감, 기술과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고질의 투자유치 등을 계속 추진하여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 화학,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등 4대 핵심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보다 강화시키고 upgrade할 계획이다. 향후 제조업은 지식 및 연구집약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연구소, 대학 및 산업 등의 R&D 노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이 싱가포르를 글로벌 R&D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특히 수출 가능한 서비스산업을 성장의 제2엔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게 될 중산층들이 교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서비스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서비스 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 추구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서비스, 여행산업 등 既 확보된 경쟁우위 산업을 업그레이드·자유화하고, 건강, 교육 등 새로운 유망산업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관급 위원회 (Ministerial Committee on Services)를 신설했다.

제 6 장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및 GPN 확대는 우리산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을 발판으로, 일본과 경합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GPN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①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를 활용한 산업발전전략 추진, ② 대내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 ③ 한미 FTA 등을 통한 능동적 개방화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시켜 주는 데 의미가 있다.

제1절. 대응전략

동북아 분업구조를 GPN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일본과는 경합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국산업 기술력의 급신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의 분업구조를 활용하면서 일본과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 및 자동차산업에서의 중국진출 성공사례를 기계, 서비스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산업의 발전·고도화 과정에서 추가적 수요가 발생하는 부문 및 국내 산업 연관관계의 핵심인 부품·소재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ASEAN,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다른 시장으로 이러한 성공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미·일·유럽 등 선진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를 활용한 산업발전전략 추진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를 산업발전의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GPN 상에서의 우리기업·산업의 강점을 강화하여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 비하여 우리 기업·산업은 앞선 기술력, 기계·설비 등 자본재산업의 보유, 브랜드 파워 및 숙련노동력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즉, 중국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핵심부품 및 장비 수요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GPN 및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소재·장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중국에 앞서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핵심 부품소재 첨단기술에 특화하여, 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 섬유기업인 도레이(Toray)(주)는 중국업체의 추격에 대응, 저부가가치 섬유화학제품에서 탈피하여 나노파이버, 나노필름, 광학필름 등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본재 부문에 있어서도 공장설비 등 중국의 자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산 기계설비(중고 포함) 등 자본재의 對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中美間 자동차부품 합자회사인 연봉 비스티온사의 경우, 대형 사출기 등 주요설비를 한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더불어 핵심경쟁력인 기술에 있어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추격은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는 기술융합화(Technology convergence) 등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적으로 기존기술과 차별화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변화의 기저에는 對中 투자에 대해 ‘비용절감형’에서 ‘시장추구형’으로의 시각의 전환이 깔려 있다. 즉, 이전의 對中 투자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광대

한 시장의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직접 생산을 한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 동반진출하는 협력업체의 신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도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조업과 융합된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 내 복잡한 유통망 및 물류시스템은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분야 한국기업에게 있어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중국 유통, 물류서비스 부문 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시설을 지원하여 공동 물류 사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급속한 소비구조 고도화에 부응 교육, 관광, 레저, 의료, 문화 등의 소비자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부유층을 위한 의료관광(성형수술 등) 서비스, 화장품 등 뷰티산업, 한류 열풍과 연계한 고급 관광·레저·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될 중국 환경산업 시장에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전기부족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原電 기자재산업의 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한중 양국간 표준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타결 시, 글로벌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신기술 표준화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2. 대내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 국내기업·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내적인 혁신역량의 강화가 관건이다.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혁신지원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유연한 노사문화의 확립,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역량을 확충,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의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본국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외법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배후의 혁신지원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중소 부품업체들이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 특히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요소기술과 이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선행 개발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 부품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또는 신규로 조성되는 협업 클러스터 내 산·학·연 네트워크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R&D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기업도 전세계의 지역별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글로벌 24시간 R&D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신기술기반 획득을 위해 해외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M&A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는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유치하는 것이다.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을 책임질 신기술 분야의 전문적 고급 인력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서 생산성 및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현장의 숙련 기능인력이므로, 숙련공의 안정적 공급 및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 조사단 파견, 비자 제도 완화 등을 통해 선진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전문인력 및 외국인 기술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립적인 노사문화에서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적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불확실한 시장상황

에 능동적으로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원활한 배치전환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GPN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분업구조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사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대립적인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강점은 저렴한 요소비용에 기초한 대량생산 능력에 있는바, 우리의 향후 강점은 디자인 능력, 브랜드 마케팅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歐美 선진국시장에 비해 한국기업의 브랜드 구축(brand-building)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중국시장을 세계적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차별화하면서 지식기반산업 및 혁신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IP 허브화를 통해 아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생산은 중국에서, R&D는 한국에서'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3. 한미 FTA 등을 통한 능동적 개방화 추진

GPN 속에서 우리 기업·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형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타깃 유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하이테크 분야의 R&D센터, 물류센터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FDI의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GPN 측면에서 인도·ASEAN 등 他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기업들의 경우 GPN 측면에서 ASEAN 국가들과 아직 유기적 협력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중국을 보완하는 투자처로서 ASEAN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바, 중국에서의 GPN 경험을 인도, ASEAN 등 신흥개도국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길 경우, 많은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실리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China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중국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전파하여, 업계의 리스크 관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조치들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중국내 지원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중국내 공관,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등 각 단체가 연합해 단순한 정보의 제공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중국내 마케팅 총력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세부 정책과제

1.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를 활용한 산업발전전략 추진

① GPN 및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은 과거 만성적 무역적자였으나, '97년에 무역흑자로 전환된 이래 '05년 227억불에 이어 '06년 1/4분기에는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19억불)의 3배가 넘는 64억불을 기록하였다.

<표6-1> 부품소재산업 무역수지

(단위: 억 불)

	2001년	2003년	2005년
수출	620	820	1,238
수입	592	758	1,011

자료: 산업자원부.

그러나, 수출증가가 핵심부품·소재의 대일수입으로 직결되고 범용 부품·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는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전산업의 대일수입 중 부품·소재 대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62.4%에서 '05년 56.6%로 감소했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부품·소재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부품·소재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현황 점검 및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한다. 향후 다국적기업들은 원가절감 압력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으로 부품공급처를 계속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산업을

필요로 하는 중·고위 부품소재를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이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중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하지만, 최근 국내 부품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글로벌화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부품업체들은 글로벌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요 대기업은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인력,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업체와의 공동 R&D를 활성화해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법령 등 부품소재 분야의 인수·합병 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부품소재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별 기업별로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 기초기술의 R&D에 집중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의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R&D 추진과제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업종별 부품소재업체 합동의 해외 IR(Investor Relation, 기업홍보·설명활동)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분야는 미국·일본·독일 등의 선진 부품소재업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9) 상해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글로벌 소싱 담당 임원 인터뷰, '06.6월

② '시장추구형'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체들에 따르면,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중국에 진출한 '원가절감형' 기업들은 임금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도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원가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국 부품조달 비율 제고 압력, 그리고 현지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직접 생산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대기업의 현지화전략으로 인해 점차 현지에서의 부품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부품업체는 향후 중국에서의 현지생산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경우에도 현지 다국적기업 등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노력으로 중국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추가적인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추구형 전략을 취하여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은 적극 현지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중국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적 우위의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지진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현지 수요처 발굴 주선, 주재국 정부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진출 업체의 신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업과 융합한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동반진출 확대

중국의 복잡한 유통망과 낙후된 물류시스템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제조업분야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의 약 86.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일 정도로 유통·물류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국 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유통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급성장하는 중국의 물류·유통 등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IT에 기반을 둔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간에 동업종에서는 물론 異업종간(제조업체 및 유통·물류 등 서비스 업체)에서도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토추(伊藤忠) 등 일본 물류기업들의 경우, 당초에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진출했으나, 점차 독자적인 중국진출 다국적기업으로서 물류사업을 확장하였다.

정부도 기존의 제조업 위주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서비스산업에도 공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유통·물류 관련 법령·제도 등 현지정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지역별 중국 소비자의 소비내역 조사, 수요층 분석, 유통구조 분석, 법령·제도, 진출업체의 성공·실패사례 등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를 DB화해, 업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韓流을 활용한 소비자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드라마 수출로 시작된 韓流가 영화·음악·패션·음식 등으로 범위가 다양화되고, 대상지역도 동남아에서 중동, 미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韓流가 우리의 잠재력이 높은 의료·교육 등의 지식서비스산업과 연결되어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의료산업의 경우 국내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으로서 미국 대비 약 80%이며, 특히 6대 癌(위, 간, 폐, 대장, 유방, 자궁) 및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우리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 수출 비중은 전체 시장규모의 0.1%에 불과하다. 또한, 한류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로 한국으로 유학하는 아시아권 외국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韓流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한류의 확산이 대상국가별로 상이한 단계에 있어, 대중문화의 유행단계 → 파생상품의 구매 단계(일본, 대만, 홍콩) → 한국상품의 구매 단계(중국, 베트남) → 한국 선호단계 등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별, 소비자계층별로 한류실태를 조사하여 국가별로 현지 맞춤형의 한류상품을 개발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제고 등 한류의 산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의료분야(예: 6대 癌, 미용·성형·치과 등)의 경우,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 교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韓流의 영향이 강한 아시아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INSEAD, Chicago대학 경영대학원 등 해외 유명대학의 유치에 성공하여 아시아의 고급 경영전문인력 양성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⑤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추진

세계 20대 오염도시 중 16개가 중국에 존재할 정도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환경관련 사업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특히 환경기술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소수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실적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선점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향후 전기부족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우리의 原電기자재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중국정부의 환경개선정책 강화 >

중국은 쑹화(松花)강 벤젠오염 사고('05.11)를 비롯한 일련의 환경사고와 산성비, 황사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11차 경제5개년규획('06~'10)의 환경정책부분에서는 자원이용률의 향상과 환경오염의 절감을 목표로 사전오염 예방 정책 확대, 산업구조 최적화 및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분야에 1,700억 불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한 재원 마련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이치뱅크는 향후 20년간 중국의 환경분야 투자규모가 수천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고, 환경기업들에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수질 및 폐수처리, 재활용산업 등 우리 환경기업들의 체계적인 중국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정책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다각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겪고 있으므로, 그와 비슷한 우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환경정책 경험 및 그와 관련된 환경기술의 적합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과 한국의 환경관련 기관간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환경시장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DB 구축 등 정보의 축적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업체들도 對中 제조업 설비투자시에는 국내의 환경산업체와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규모 및 기술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 환경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시장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시 우리의 原電기자재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부협력 채널이 강화되어 한다.

⑥ 중국과의 기술표준 관련 협력 강화

중국정부가 기술도입 전략을 기존의 '시장과 기술의 교환' 전략에서 독자개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기술표준 제정에 있어서도 자체 표준을 강조하고 있다. 무선단말기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이 다르면 한·중 상호간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국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한다.

< 국제표준화 선점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 D사의 온돌난방용 폴리에틸렌 관 >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식 온돌 문화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건물 신축시 온돌난방시스템을 채택하여, 난방용 플라스틱 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D사는 기존 온돌파이프 재료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에 진출 시도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신소재가 온돌 파이프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D사 독일 하노버 국제플라스틱 컨퍼런스 등 국제무대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ISO 공식 국제표준안(DIS)으로 채택하였고, 국제표준제정 이후에 수출이 240% 증가하는 성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 지역에 획기적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표준 설정, 신기술 상용화, 제품화 등에 있어 중국 등 타국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DMB, Wibro 등 통신시장의 신기술 표준을 한국에서 먼저 개발·상용화하면 차후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데 크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동북아 표준협력체제 구축 사업 등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 중인 한중 양국간 표준화 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기업의 중국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간 표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표준 제정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대내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

⑦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규모가 영세한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역량 및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생산, 조립 등의 기능은 해외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핵심기술의 R&D 등은 본국에 두어 해외법인을 지원하는 배후의 혁신지원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에 조성되었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수요자)보다는 국내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급자 시각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에 생산기능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를 민간 및 대학 등이 참여해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별 클러스터 유망지역을 예로 들자면 창원(기계부품), 구미(전자부품), 광주(광부품), 원주(의료기기 부품), 군산(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한·중 연합클러스터 조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중국 대학의 연구기능과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 생산을 연계시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제품으로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한·중 연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체의 조정자로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 장기개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산·학·연·관 연계시 중요한 것은 개별 기술개발 주체간에 공정하고 명확한 성과배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개별 기술개발 주체로부터 최대한의 기여를 끌어내 그것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현지의 산·학·연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시켜, 선진기술의 이전 및 전파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GM은 중국에서 칭화(淸華)대 등 5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99년) 고급기술개발 및 중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 연구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産學기술이전 센터가 산학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취득, 응용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국 淸華大의 경우 학교기업의 매출이 '03년 152억 위안으로 8년만에 약 20배가 증가하였으며 정보,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첨단 벤처기업을 다수 육성하는 성공적 산학연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 동북아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 R&D허브 : 울산 오토밸리 >

울산 오토밸리는 세계 4대 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울산시와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완성차 및 부품업체 집적화단지로 조성되었다. 단지 내에 부품혁신센터, 부품소재단지, 모듈화단지 등을 설립하고, 완성차업체와 부품회사간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R&D와 생산기능을 통합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범용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토록 하고, R&D 기능 및 핵심 부품 생산은 한국에서 생산토록 하는 이원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즉, 국내 부품 공장이 '모공장(Mother Factory)'가 되고, 이곳에서 연구개발, 생산 등에서 Best Practice를 만든 후 이를 중국 부품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을 추월해 세계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⑧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는 R&D 투자 중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28위)이다. 2004년 현재 R&D 중 외국자본에 의해 수행된 것은 0.4%에 불과하며, 이는 오스트리아(20.4%), 영국(19.4%) 등의 1/5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0.3%) 다음으로 낮다(OECD, 2005).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까지 한국은 중국 (750개)보다 많은 900여건에 가까운 외국기업 R&D센터를 유치하였으나, 이들 센터들은 규모가 영세하며 바이오, 제약 등 한국의 유치희망 분야 보다는 한국 대기업의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화학 등의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외국기업 R&D센터는 연구(R)보다는 개발(D)에 치중하여 국내산업에의 파급효과도 한정적이며, 우리기업이 설립한 해외 R&D 센터 역시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단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과 대학·연구소의 지원 프로젝트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글로벌 R&D센터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기업들은 R&D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기업도 전 세계의 지역별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글로벌 24시간 R&D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의 경우 한국, 인도, 중국에 R&D센터를 구축하고 시차를 활용한 24시간 R&D 체제를 가동 중이다. 더불어, 해외의 신기술기반 획득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기술업체의 M&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 업체인 레노보의 IBM PC사업부문 인수, 상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역시 선진기술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⑨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유치

현재 한국의 산업 인력 부족 문제는 신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인력 및 제조업 현장의 숙련 기능 인력의 부족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과의 GPN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직적 분업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부족은 대학의 교육 내용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내용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전경련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실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한다. 경총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그 교육기간은 평균 20.3개월이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신입사원 1인당 교육비용은 6,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공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에 대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신기술의 신속한 상품화, 생산 변동에 대한 유연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의 숙련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진출 일본 업체들의 U턴 현상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 차원이다. 북경 현대와 천진일기도요타의 공장장은 중국 근로자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들 현지 근로자들이 사회경험이 짧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중국 현지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숙련공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중국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부족과 그에 따른 잦은 이직, 중국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이 주로 단기계약 위주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내 숙련 기능공들의 현장 지도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장 숙련 기능인력의 노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능직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숙련 기능인력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은 대학교육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社内 기술대학원 설립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현장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기술대학원을 통해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사 엔지니어들을 초빙하여 부품회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학도 교과과정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현장에서의 인턴십 강화를 통해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C사의 경우, 협력 대학 재학생에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전자, 기계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교수 지도 하에 회사 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이수 과목 및 참가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전문인력 및 외국인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공급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수 여성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등 여성 기술인력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은퇴한 대기업의 고급인력을 DB화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숙련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능올림픽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강화, 국가 주요 행사에 우수 기능인 초청 등을 통해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업계 고교 및 기능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⑩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한 GPN 선순환 구조 강화

현재 한국 기업이 동북아 분업구조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고용 및 해고,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부족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유연성은 OECD 29개국 중 약 12위로 중위권에 해당하며, 체코, 헝가리, 일본 등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04).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의 40.8%가 한국의 노무환경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KOTRA, '05), 외국인투자의 유치에도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기능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산업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여기서, 기능적 유연성이란 근로자 개개인이 생산현장에서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본 혼다자동차의 경우, 근로자 1명이 1개 라인에서 최대 8개 모델을 조립할 수 있도록 훈련된 반면, 우리나라의 B사는 3개 모델만 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양국 현장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 격차가 양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격차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기능적 유연성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시장의 급격한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쟁력, 즉 품질, 생산성,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대응능력이 뛰어난 숙련 기능인력의 육성과 동시에 원활한 배치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측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고, 노조는 배치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노사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차원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노사정 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잘못 알려진 우리의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006.6월 뉴욕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설명회(IR)의 경우 정부 각료, 노동계 대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정부는 노사 지도자가 함께 참가하는 합동 해외 IR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모토로라 중국법인의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창출 사례 >

모토로라 중국의 경우 S/W 개발 및 디자인 등은 인도, 미국 등의 전문업체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경우 인도 등의 아웃소싱 업체는 모토로라 중국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여 현지 사무소를 열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해외업체에의 아웃소싱이 국내 일자리 상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 외국인투자(FDI) 유발 및 현지고용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Virtuous circle)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오히려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⑪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의 고부가가치 역량 확충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산 제품의 디자인 수준은 선진국의 89% 정도이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의 경우, 해외판매망 확보는 주로 개인적인 바이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직매장·판매회사 설립 등의 적극적 방법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수출시 사용하는 브랜드에 있어서는 29%가 'OEM과 자기상표' 수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22%만이 '전량 자기상표'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가치사슬 중의 고부가가치 부분의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현지 디자인 센터 설치, 현지 디자인 전문가 고용 확대, 현지 디자인관련 기관과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한 디자인·브랜드의 현지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간 공동 브랜드 육성·사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브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외 마케팅 수단을 전통적 방법(전시회, 에이전트, 카탈로그 등)에서 인터넷 마케팅, 전자무역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디자인, R&D 전문기업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소싱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이 아직 한국을 따라오기 힘든 한국인의 창의성, 감수성, 섬세함이 깃든 디자인 분야에서의 강점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현지업체 임원 인터뷰: '06.6월).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디자인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인력의 확충은 물론, 현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시장동향(수요동향, 경쟁사 동향 등), 경쟁사 전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사 기능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의 디자인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新국가브랜드 전략 >

일본은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新일본양식(Japanesque Modern)'이라는 新국가브랜드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도요타, 마쓰시타 등 12개 주요기업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바탕으로, 일본고유의 로고 개발, 디자인 양식의 제품,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네오저패니스크·브랜드추진간담회' 이름으로 '05.7월, 『新日本様式の 確立을 向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한복·한글·김치·태권도 등 '한국문화CI' 사례('96. 12)도 소개되어 있다.

한편, 신일본양식협의회는 '06.6월 인증마크인 'J마크'를 결정하고, 10월말까지 신일본양식 100선을 결정하여 국내외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⑫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지식재산권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업계 5위업체인 기서자동차는 GM대우의 '마티즈'를 모방한 체리 QQ 모델로 성공하였으며, 기타 삼성·LG휴대전화 복제품 등이 중국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중국과 차별화하면서 지식기반산업 및 혁신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급선무이다.

동북아의 IP(Intellectual Property) 허브화는 아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생산은 중국에서, R&D는 한국에서'라는 대안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3M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에 대한 우려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아시아의 IP 허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R&D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駐中 지식재산권 전담조직(IP-CHINA)을 통해 중국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산업기술유출방지및 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총 51건, 66조 원 상당의 기술유출 시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신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를 병행하도록 장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05년 말 현재 국제표준에 반영 또는 심의 중인 한국기술은 184건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3. 한미 FTA 등을 통한 능동적 개방화 추진

⑬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타깃 유치활동 강화

거대한 내수시장의 중국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은 점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부문의 대규모 M&A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실물부문의 기업설립형 투자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비판은 점차 사회전반의 반외자정서로 확산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우리나라가 분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R&D, 디자인 등의 핵심기능은 국내에 두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도기술, 선진기법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추진으로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하이테크 분야의 R&D센터, 물류센터 등 고부가가치형 FDI의 집중 유치는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면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유치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융·반도체전기·디지털전자·유통·물류·화학·기계·운송장비 등 국가주력산업, 바이오테크·문화관광·환경·대체에너지·SOC 등 유망산업은 향후 한정된 국가의 FDI 유치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표 산업군이라고 하겠다.(KIET, '05)

최근 유망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는 한국을 선택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중국과 관련해 한국이 줄 수 있는 이점들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북아 분업구조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투자 가치를 개발해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한국업체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삼각 FDI'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년 절반 이상의 FDI는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볼 때, 既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 FDI는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국내 경제에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된 외국기업이 국내 부품소재업체로부터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매치메이킹(matching), 국내업체와의 기술개발협력 및 인력교류 등 현지화 지원(Linkage)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중국의 M&A 등 對韓투자 확대 가능성 >

중국의 對韓투자는 요식업, 도·소매업 등 소규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규모 M&A건의 성사와 함께 투자 규모, 업종 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시장 개척,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IT,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유통서비스 등의 분야로 투자업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對韓 주요 수입 품목인 중간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06.6월 외환 보유액이 9,411억불에 도달,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은 기술획득, 시장개척, 자원확보 등을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투자(走出去)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67개 국가별로 투자 또는 인수장려 산업들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제조업(자동차 등 교통운송설비 제조, 화공원료 제조,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 서비스산업(무역, 유통, R&D, 건축, 교통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중국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04.6월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에서 중국기업 유치세미나를 열었으며, 스웨덴은 '02년 상하이에 중국기업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밖에, 일본의 지자체들도 중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의 자본유치는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향후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국시장에의 교두보를 선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중국의 對韓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 본토의 투자는 물론 화교자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對韓 투자는 세계 華商 자본의 對韓 유입을 유발할 것이며, 중국시장 및 화상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즉, 중국 모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함으로써 중국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화상네트워크를 통한 화교권 국가로의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호 투자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한중간 산업·기술협력 및 분업체계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부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재원이 필요한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국자본을 균형발전 촉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상 민감하거나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對韓 투자는 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⑭ GPN 측면에서 인도·ASEAN 등 他 시장과의 협력 강화

한국기업들의 경우 GPN 측면에서 인도·ASEAN 국가들과 아직 유기적 협력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향후 중국을 보완하는 세력으로서 인도·ASEAN·러시아·브라질 등 후발 개도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ASEAN 국가별 자동차 부품 특화를 통해 수평적 GPN 구조 하에 부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對중국 리스크 분담 및 유망 新시장 개척 차원에서 인도, ASEAN 등에 대한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이미 일본, 중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GPN 구축의 후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략거점 국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거점국가로서는 베트남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유망진출지역인 인도, ASEAN, 중동 등에 대한 기업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²⁰⁾의 운영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한·베트남 투자협력공동위원회」 등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대상 국가별로 양국 기업들간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의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인력교류/연수, 공동연구 등 협력 가능한 범위의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 정부는 현재 중국 3개소(북경, 상해, 청도)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06년 중 중국 광저우(廣州), 베트남 호치민(胡志明)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⑮ 개성공단 모델의 확대

개성공단 모델은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뿐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과도한 해외이전(off-shoring)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소기업체에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3단계에 걸친 총 2,000만평 규모의 공단 개발사업이다. 이 중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동시에 시범단지 2만 8,000평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공단 조기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 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범단지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범단지에는 2004년 12월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 2006년 3월 현재 1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4개 기업이 공장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의 시범단지 운영상, 생산시설 구비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물품 반출 문제, 그리고 향후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산지 인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파주, 문산 등 개성 인근에 원·부자재, 생산제품의 공동집하, 수·배송, 통관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전략물품반출, 원산지 인정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인정은 입주기업의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향후 제2, 제3의 개성공단 모델의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의 분양 및 입주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⑩ CHINA RISK의 체계적 관리

한국의 對중국 경제협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발 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금리인상 조치,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 공급과잉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원과 자동차, 전자 등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의 중국 담당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경제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차이나 리스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집, 분석된 자료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홈페이지(www.chin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3만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푸시 메일 서비스(Push-mail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봉착하고 있는 애로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의 정부 파견기관과 기업간, 동업종간,異업종간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식나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전에 리스크 요인을 인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의 차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對중국 관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적 리스크(예: 위안화 절상, 물가상승, 금융위기, 원자재 및 에너지난 등), 정책제도 관련 리스크(예: 외자기업정책, 노사관계, 사회갈등 지배구조)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⑰ 중국내 지원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對中 투자 및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商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편이며, 국가 이미지도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또한 교통과 물류, 언어적 여건 등을 이유로 對中 투자도 산둥성(靑島 등) 및 장쑤성(蘇州)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인력 스카웃 등 우리 기업들간의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한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는 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 진출 업체간 인력채용 등에 대한 자발적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진출한 업체가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 장기간 훈련을 통해 인재로 양성해 놓으면, 나중에 진출한 업체들이 이들을 스카웃하면서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등 우리 업체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 한인상회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시켜 감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협조 하에 산자부가 운영 중인 경영지원 교류회를 활성화하여, 수혜대상 지역과 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경영지원교류회를 중국 상무부나 현지 지방정부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족한 현지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해 KOTRA 등 현지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주요 협회 또는 기관들이 연합으로 한국 상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한류 스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 내지는 제품 이미지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 산업내 분업을 담당할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공계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